

본 발간물은 동북아시대위원회에서 수시 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작성한 과제물로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시대」 연구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동북아시대위원회의 공식적인 의견을 반영한 것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과제수행자 : 박 경 석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동아시아연구실 연구교수)



#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갈등의 역사

2005. 1

동북아시대위원회



## 서 문

고대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은 갈등과 협력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적 경험은 동북아의 미래를 열어나가는 희망의 지표가 되기도 하지만 상호 갈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특히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신사참배 문제 등은 동북아가 협력과 공존의 미래를 열어 나가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올 해는 을사보호조약 100주년, 광복 60주년, 한일 국교 정상화 40주년을 맞는 의미있는 해입니다.

이러한 때에 동북아 국가들은 과거 협력과 갈등의 역사를 돌이켜 보며, 협력의 기회를 늘리고 갈등의 요소를 줄여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뜻에서 우리 위원회는 한중일 3국을 중심으로 한 동북아 지역의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의 역사, 그리고 갈등과 분쟁의 역사를 한 곳에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책을 통해 고대 이후 면면히 이어져온 한중일간의 협력과 갈등의 역사를 이슈별로 고찰하실 수 있으며, 동북아 협력의 미래상을 그려볼 수 있는 단초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이 연구를 수행해주신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박경석 교수께 감사드리며, 이 책이 동북아지역의 역사연구를 수행하시는 많은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5년 1월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문 정 인



## 목 차

I. 머리말 .....	1
II. 韓中日의 이슈 .....	3
III. 韓中의 이슈 .....	18
IV. 韓日의 이슈 .....	48
V. 맺음말 .....	72





##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갈등의 역사

### 1. 머리말

고대부터 오늘날까지 한중일 3국은 그 지리적 요인으로 인해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어 왔고 이는 거의宿命적이었다. 각국 사람들은 빈번히 서로 이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시로 왕래하였다. 이에 따른 활발한 교류를 통해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역사서술 등의 문화요소를 각자의 처지에 맞게 공유하면서 ‘동북아 문화권’을 형성하였다. ‘동북아 문화권’이 형성되는 데에는 한국의 교량 역할이 매우 중요했는데 한중관계와 한일관계가 중일관계보다 더 긴밀하였음은 이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볼 때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그에 못지않은 숭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러 전쟁으로 치닫곤 하였다. 특히, 근대 이후 한중일 3국이 각각 植民地, 半植民地, 帝國主義 국가로 分岐되면서 갈등구조가 성립되고 그 분쟁의 역사가 극에 달하게 되었다. 그 여파가 오늘날에까지 이어져 한중일 3국의 국민들 사이에는 상호 불신의 골이 깊게 파여 있다. 이는 역사서술에서도 마찬가지로 동북아 국가들은 모두 자국 중심주의에 입각하여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

20세기 후반 차례로 이어진 한중일 3국의 경제적 성취는 동북아가 모처럼 세계사에서 제 자리를 찾을 수 있는 호기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좋은 기회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협조라는 선결조건이 절대 불가결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반도라는 지리적 요인으로 교량의 역할을 수행할 때 가장 영향력 있고 번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의 화해와 협력이 더욱 절실하다.

그럼에도 최근 고구려 역사에 대한 중국의 태도 변화가 부각되면서, 기왕에 있던 일본교과서 문제를 포함해, 역사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3국의 갈등과 불신이 증폭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단기적으로는 정치·외교적 측면에서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견지해 나가야 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사인식의 공유를 통해 화해와 반성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상호 협력했던 역사경험과 공유했던 가치를 되살려 화해의 자산으로 삼고 갈등과 분쟁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진정한 지역협력, 공동번영의 길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런 견지에서, 동북아 각국의 역사인식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가운데 一國史의 관점이 아니라 동북아 역사를 하나의 지역단위로 놓고 바라보는 관점에서 인식하고 정리해볼 필요성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이에 필자는 역사적 맥락에서 화해와 반성, 공동번영의 자산이 될 수 있는 한중일 3국의 역사경험을 발굴하고 정리하는 본격적인 대규모 연구프로젝트를 기획하면서, 이를 위한 ‘초보적 기초작업’으로서 한중일 3국 사이의 협력과 분쟁의 역사경험에 해당될 수 있는 이슈들을 조사해 목록(Issue Inventory)으로 만들고자 한다. 근래 현안이 되고 있는 갈등과 분쟁의 이슈보다 협력의 경험을 찾아보는 데에 힘쓸 것이다. 또한 기존에 역사학 연구에서 쟁점이 되었던 이슈뿐만 아니라 많이 거론되지 않았더라도 위의 취지에 부합될 수 있는 소재에도 주목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韓中日, 韓中, 韓日의 이슈로 나누어 각 항목마다 해당 이슈들을 배치하고, 각 이슈가 당사국 사이의 ‘갈등’이나 ‘협력’의 역사경험에 해당되면 【갈등】이나 【협력】이라는 표시를 달고, 가치 중립적이어서 판단을 유보해야 하는 것은 【중립】이라고 표시할 것이다. 나아가 각 이슈에 대한 간략한 사실 관계의 설명을 붙이고, 본 프로젝트 작업의 취지에 맞추어 어떤 연구 의의 내지 시사점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간략히 서술한다. 한중일의 이슈에서는 대체적으로 포괄적 이슈를 다루고, 한중과 한일의 이슈에서는 보다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사안들을 다룬다. 또한 이해를 돕기 위해 각국 학계의 이견이 분명할 경우에는 이를 구분해 간략히 서술할 것이고, 필요할 경우 가능한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을 보다 큰 범주로 묶기도 할 것이다.

## II. 韓中日의 이슈

### 고대 '동북아 문화권'의 형성과 발전

### 【협력】

한중일 3국은 지리적 근접성으로 인해 다른 문화권과 구별된 독자적 문화권을 이루고 살아왔다. 漢字가 통용되었고 儒敎가 국가 및 사회의 지도 원리로 전파되었으며, 佛敎와 律令制를 공유하였고, 독특한 日曆體系, 醫療體系, 藝術體系 등을 향유하였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컸음은 의심할 여지가 없으나 동북아가 공통의 문화를 공유하게 된 것은 동북아를 구성한 모든 구성원들의 창조적 역량이 광범하고 지속적으로 상호 교환된 결과였다. 예컨대 전통시대의 한국은 중국에 비해 생산력이나 인구규모 등에서 약소하고 지리적으로 극동에 편재되어 있어 문화교류의 다양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웠으나, 이런 환경의 한계를 넘어 놀라운 문화적 창조력을 발휘했고 높은 수준의 문화를 창조하였다. 이는 고대 중국인의 그것과 결합하여 새로운 문화요소를 창출하거나 기존 동북아 문화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다. 중국학계에서는 단순히 동북아 문화를 중국 문화가 확대되어 만들어진 것으로 보려는 관점이 있으나 이는 '大國主義的' 논리의 횡포에 지나지 않는다. 모든 문화는 그 고유한 가치를 갖기 마련이고 역사에서는 오로지 문화와 문화가 만나 제3의 문화로 재창조되는 문화의 融合만이 확인될 뿐이다.

한중일 3국이 이처럼 문화를 서로 주고받아 주요 문화요소들을 공유하면서도 각자 나름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발전시켜왔고, 이는 3국이 상호 협력했던 역사경험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강조되어야 마땅하다. 이와 관련 지금까지 동북아 역사에 관한 시대별, 분야별 연구는 수없이 이루어져 왔지만 이를 문화사적 관점에서 통시대적이고 포괄적으로 종합하여 보려는 시도는 그리 흔치 않았고, 사실 이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일은 결코 쉽게 기대할 만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동북아가 근대사

에 내재된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굳건한 평화를 일궈나가는 데에 전 통시대 문화교류의 역사를 되살려 강조함은 크게 의미 있는 일이다. 아래에서는 이런 관점을 바탕으로 깔고 ‘동북아 문화권’이 공유했던 여러 문화요소를 중심으로 그 교류에 역사에 대해 간략히 살펴본다.

#### 동북아 문화교류의 통로에 관한 고찰

【협력】

고대 동북아 3국이 위낙에 독자적인 토착문화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漢字, 儒敎, 佛敎, 律令, 歷史敍述의 傳統 등 몇 가지 중요한 문화요소를 공유하게 된 것은 지속적인 문화접촉에 의해 이루어진 결과이다. 그 문화교류의 통로는 대개 ① 遣唐使나 燕行使와 같은 외교사절과 이에 동행한 학자 및 승려, 외교관계의 보장을 위해 볼모로 파견된 宿衛, ② 古朝鮮에서 정권까지 획득한 衛滿 집단, 일본열도로 건너간 백제 유민, 壬辰倭亂 당시의 10만 조선인 포로 등, 각 시기 다양한 형태의 대규모 이주민, ③ 崔致遠, 義湘, 圓光, 圓仁 등가 같은 유학생 및 留學僧, ④ 특성상 기록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수적으로 가장 많았고 일상생활문화와 가장 밀접했던 것으로 보이는 무역상인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동북아 문화권’이라고도 칭해지는 주요 문화요소의 공유는 가장 분명한 ‘협력 사례’로서 다양한 관점에서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문화교류가 어떤 통로를 통해 이루어졌는지를 통시적으로 고찰함으로써 동북아 문화교류와 이에 따른 문화발전의 역사를 보다 풍부하게 인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동북아 지역이 진정한 화해와 공동번영의 길로 나아가는 데에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역사적 자산을 확인하고 그 역사경험을 공유하는 일이 될 것이다.

#### 한일 양국의 한자 수용과 고유의 문자생활

【협력】

동북아 지역에서 문자가 언제 생겨났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중

국의 신석기 仰韶文化(B.C 5천년)에서부터 초기문자의 발생을 암시하는 토기부호가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자로서 체계를 갖추어 현재 알아 볼 수 있는 최초의 한자는 甲骨文字인데, 이는 商나라 후기에 쓰여진 문자로서 한자의 역사는 적어도 3,500년이나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자가 언제 처음 한국사에 들어왔는가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史書가 편찬되고 佛經이 수입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3~4세기에 이르면 한자 및 한문에 능숙한 다수의 지식인이 배출되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의 경우 4세기에 백제를 통해 처음으로 한자가 전래된 이래 7~8세기에 이르면 본격적으로 史書가 편찬되는 등 한자 및 한문 사용이 정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한자의 전래는 문자생활은 물론이고 언어생활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문자역사에 한자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한국사에는 5세기 무렵 鄉札, 吏讀, 口訣이 있었고 1446년에는 訓民正音が 반포되었다. 일본에서는 7세기에 카나(假名)가 생겨나기 시작하여 9세기에 이르면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오늘날의 히라가나(平假名)와 가타카나(片假名)에 이르렀다. 이는 모두 10세기 이후 나타나는 동북아 여러 민족의 고유문자(거란, 여진, 몽고문자 등)와 마찬가지로 한자를 기본문자로 설정한 위에 언어의 차이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실용적 목적에 따라 만들어졌다. 다만, 訓民正音은 워낙에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근대 이후 한글이라는 독자적인 문자로 발전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동북아의 문자생활은 한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그래서 한자는 筆談의 형태로 國際語로서의 기능을 담당하기도 했다. 비록 발음은 서로 다르지만 한자의 고정성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동북아 지식인 사이의 직접적 의사소통 및 정보전달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한자의 존재와 그 전파는 동북아가 상호 이해하고 공통된 문화요소를 가지는 데에 기본바탕이 되었고 그 공유의 역사는 동북아 문화사와 세월을 같이 한다. 이런 점에서 한자의 공유는 대표적인

‘협력 사례’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역사연구를 통해 자기중심의 역사의식에서 벗어나 명실상부하게 한자를 동북아 역사의 공동 소유로 인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는 동북아 3국이 모두 어떤 형태로든 현재에도 한자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요긴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 유가사상의 전래와 한국 및 일본 유학의 독자성      【협력】

儒家는 춘추전국시대 제자백가 중에 하나로 중국사상의 근간을 이루어왔다. 漢代에 ‘儒敎國敎化’가 이루어지면서 근대 이전 2천년 넘게 정치, 사회, 문화의 지배이데올로기로서 그 獨尊의 지위가 공고하게 유지되었다. 한국사에서는 4세기 무렵 고구려에 太學이, 백제에는 五經博士가 설치되면서 수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통일신라 및 고려시대에는 단순한 중앙집권의 도구로 여겨졌고 자연이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조선을 창업한 세력은 부패하고 노쇠한 불교사회(고려)를 개혁하여 새 시대를 연다는 견지에서 性理學(朱子學)을 지배이념으로 채택하였고, 조선은 가장 모범적인 유교사회로 변모되었다. 일본은 주로 백제를 통해 유학을 수용하는데, 경전에 대한 지식이 5세기 王仁에 의해 야마토(大和)정권의 귀족층에 처음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일본에서 유가사상의 영향은 내내 매우 제한적이었다. 일본은 역사적 정체성을 대체로 토착적인 神道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였고 근세에 들어서는데 지배계층이 武人인 사무라이들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儒者의 역할은 실무적이었고 유학의 영향은 간헐적인 것이었다.

이처럼 한·중·일 3국에 있어 유가사상의 지위는 각기 다른 특성을 갖지만 역시 국가, 사회, 문화, 사상 등의 영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동북아에서는 수많은 국가와 사회가 명멸하였는데 이들 국가와 사회를 지도한 원리로는 ‘유교적인 것’이 가장 우세하였다. 동북아 3국이 근대 이후의 갈등에서 벗어나 공정하고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의 문화와 사상에 대한 이해가 바탕에 깔려야 한다. 이런 관점에서 동북아에 공히 유가사상이 존재했다는 보편성과 각국 사상의 역사적 맥락이 각기 달랐다는 특수성이 치우침 없이 이해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 한중일 佛敎文化交流史 : ‘불교문화권’으로서의 동북아 【협력】

동북아 3국의 문화교류와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불교문화의 비중은 매우 크다. 주지하듯이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동북아 3국에게 공히 외래종교였다. 불교는 처음에 도교의 한 변종, 즉 새로운 종류의 方術로 여겨졌으나, 64년 後漢 明帝의 꿈에 부처가 나타났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이니, 이미 상당 정도 퍼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魏晉南北朝, 隋·唐代에 이르는 4~9세기에 걸쳐 불교가 크게 융성하게 된다. 불교가 융성하게 된 이유는 분열기의 사회적 불안과 지배자의 장려, 도교 및 유교와 쉽게 타협할 수 있는 불교의 유연성 등을 들 수 있다.

한국의 경우, 고구려와 백제는 5세기 중국을 통해 수용하였고, 신라는 528년 異次頓의 순교를 계기로 불교가 공인되기에 이른다. 전래 초기 갈등이 있었으나 당시 중앙집권을 꾀하던 지배세력의 보호와 혼란한 시기 고등종교를 갈망하던 민중의 이해가 맞아떨어지고 여기에 토착종교와 잘 융합되는 불교의 유연성이 더해지면서 크게 융성하게 되었다. 특히, 한국불교는 일본에 불교를 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중국 불교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많은 승려를 배출하기도 했다.

일본은 538년에 백제로부터 불교가 전래되었는데 처음에는 큰 반향을 불러일으켰다. 자기의 선조가 神임을 위신의 근거로 삼고 있던 야마토(大和)정권의 호족들에게 불교는 현실적인 위협이 되었다. 6세기 중엽 야마토의 군주가 백제에서 가져 온 불상을 숭배해야 할지를 자문하였을 때, 불교를 옹호하던 蘇我氏와 반대하던 物部氏가 대립하여 큰 분쟁이 일어났는데, 蘇我氏의 승리로 불교의 지위가 확고해진다. 이후 불

교는 권력의 보호와 불교 교리의 유연성 등으로 인해 크게 융성하게 된다. 4~9세기는 동북아에서 '불교의 시대'라고 부를 만큼 그 영향이 컸고 각국에 불교가 정착되는 과정에서 3국은 긴밀히 협력하였다. 불교에 대한 종교적 열정은 다른 분야에서의 문화교류를 자극하기도 했다. 오늘날에도 불교는 3국에서 공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북아 3국이 역사적 맥락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인식함에 매우 유용한 매개가 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심도 있는 역사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불교계 인사들의 교류는 상호이해를 높이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한일 양국의 律令制 채용과 고대국가 성립

#### 【협력】

律令制란 국가의 법체계이자 정치체계를 말하는 것으로 형벌규정 [律]과 국가기구 혹은 조세와 토지제도 등을 규정한 행정법[令]을 합하여 律令制라 한다. 중국 唐代에 정립된 律令制는 당시까지의 고대적 관습과 관행을 정비·통합하여 법제화한 것이다. 당시까지의 역사전개 과정에는 ① 중앙집권적 황제지배체제와 ② 귀족·호족 중심의 분권적 신분질서라는 두 가지 흐름이 공존했는데, 律令體制는 이런 두 가지 흐름이 타협하고 융합되면서 구축되었다. 그래서 皇帝權(一元的 皇帝齊民支配體制)과 귀족의 기득권(신분질서)이 한 체제 내에서 동시에 용인되는 이중적 구조를 이룬다. 이런 共存性 또는 妥協性, 開放性이야말로 율령체제가 동북아 통치체제의 바탕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唐代 중국에서 律令體制가 완성되고, 율령체제는 중앙집권(왕권)을 강화하거나 지배체제를 정비하려는 주변지역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서 적극적으로 수용되었다. 대개 율령체제의 도입은 곧 고대국가의 성립을 의미한다. 한반도의 삼국, 통일신라, 발해 등은 모두 정치체제를 정비하면서 율령체제를 도입하였다. 중국과 한국의 영향에 의해 일본도 다이카(大化)改新(646)을 통해 다이호오(大寶)律令(701)을 공포함으로써 율령체제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이 정치제도에 있



어 완전히 ‘中國化’한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중국의 제도를 도입하면서도 나름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변용 시킴으로써 스스로의 정치·사회적 전통의 핵심을 지키는 일에 배려하였다.

동북아 고대국가체제가 시기와 지역에 따라 나름의 특수성을 강하게 담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律令’이라는 요소를 공유했던 역사는 ‘동북아 문화권’의 형성과 관련 빼놓을 수 없는 소재이고, 동북아 3국의 문화교류 또는 상호협력의 역사적 자산이 될 수 있다.

#### 고대 한중일 3국의 역사기술

#### 【협력】

이제까지 그리 학계의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동북아 3국이 역사기술의 전통을 일정 정도 공유했다는 사실도 고대 ‘동북아 문화권’의 형성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게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史記』나 『漢書』 등 역사서술의 전통이 매우 일찍부터 정착되고 발전하였다. 이에 영향 받아 한반도에서도 4세기 후반부터 고구려의 『留記』, 『新集』과 백제의 『百濟紀』, 『百濟新撰』이 편찬되고 신라에서 『國史』가 편찬되는 등 한자나 한문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식계층이 형성되면서 역사를 체계적으로 기술하는 기풍이 진작되었다. 현존하는 『三國史記』만 보아도 중국 正史의 형식인 紀傳體를 모방한 중국적 체제를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事大交隣’이라는 당시 세계질서에 대한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어 중국의 문화적 영향을 간과할 수는 없다. 일본에서도 늦게나마 8세기 초에 『古事記』와 『日本書紀』가 편찬되었다. 현존하는 『古事記』와 『日本書紀』는 중국의 國家觀과 華夷觀을 급작스럽게 모방하여 허위와 조작이 심하다고 여기지지만, 그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역사기술의 전통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교류의 한 부분으로서 ‘동북아 문화권’의 형성과 관련하여 새롭게 주목될 필요가 있다.

19세기 서양의 萬國公法的 국제질서와 조우하면서 심각한 갈등 양상을 드러내기 전까지, 전통시대 동북아에는 중국의 자기중심적 ‘중화주의 세계질서’가 기본적으로 관철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두 가지 함의를 갖는데, 하나는 역사상 실제로 중국 중심으로 편성·유지되었던 전통시대 동북아의 현실적 세계질서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역사상 실제와 상관없이 동북아 질서가 중국 중심으로 편성·유지되고 있다고 인식하거나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는 중국인의 관념적 세계질서를 의미한다. 양자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서로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런 중화주의 세계질서는 이념으로서의 華夷觀과 제도로서의 冊封朝貢體制로 구성되어 있다. 華夷觀이란 천하를 세계의 중심이고 유일하게 뛰어난 中華와 그 주변민족을 夷狄으로 구별해 인식하는 가운데 나타난 이분법적 세계관이다. 그러나 이런 자기중심적 이분법만으로 주변국가와 정치적 관계를 맺기에 한계가 있어 또 다른 논리를 동원했는데 그것이 문화주의[王化思想]이다. 즉, 華夷를 구별하는 기준은 종족이나 영토의 차이가 아니라 禮敎文化의 구현 여부에서 찾았던 것이다. 「禮」를 갖추면 어느 종족이건 어디에 있건 中華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華夷觀에는 분리의 논리와 결합의 논리가 함께 내포되어 있다. 이런 華夷觀念을 구체적으로 구현하는 장치로서 冊封朝貢制度가 수립되어 유지되었다. 하지만, 중화주의 질서는 이미 중국 고대에 형성되어 지배영역의 확대와 함께 점차 그 外延이 넓어져 왔고 그 이념이나 틀도 점점 정교해졌으나, 실제에 있어서는 그 경계가 모호하고 유동적이어서 시대의 변화와 정치·군사적 역학관계에 따라 그 내용이 실로 다양하고 복잡하게 전개된다. 예컨대, 일본이 894년 遣唐使의 파견을 중단해도 굳이 군대를 보내거나 응징하지 않았고 조공을 하던 이민족들이 중원지역을 정복하여도 이들을 국가권력으로 용인하였다.

또한, 전통시대 동북아의 중심에는 중국이 놓여 있었으나, 동북아 질

서가 중국에 의해서만 구축되고 운영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형성하고 창출한 것이다. 전통시대 한국과 일본도 유기적인 동북아 질서를 이루었던 주요 구성원이었던 것이다. 이들은 각각 별개의 역사공동체를 형성하여 독자적인 역사를 전개하면서도 동시에 다른 나라들과 더불어 동북아라는 한 차원 높은 역사공동체를 형성하여 공동의 운명과 문화를 서로 나누었던 것이다.

冊封朝貢關係는 제국주의와 식민지 사이의 근대적인 종속관계와는 전혀 다른 것으로, 중국과 주변 국가들이 서로 책봉과 조공의 禮를 교환하되 내정과 외교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 일정 정도의 차등관계일 뿐이다. 쌍방이 책봉과 조공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비로소 성립되는 관계이므로 어느 일방의 욕구와 일방적 강요에 의해 성립될 수 없다는 본질적 성격을 갖는다. 冊封과 朝貢이라는 宗主國의 군주와 藩屬國의 군주 사이에 맺는 宗屬關係는 곧 從屬關係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등적이거나 독립적인 국가간에 성립된 외교관계 또는 국제관계로 보아야 옳을 것이다.

冊封朝貢關係의 본래적 기능은 정치·외교적인 것이었으나, ‘進貢’과 ‘回賜’라는 국가간 물물교환의 과정으로 진행되고 민간의 공식·비공식 무역이 수반되었다는 점에서 국제무역이라는 경제적 성격을 갖기도 한다. 흔히 이를 ‘朝貢貿易體制’라 하는데 해당 국가간의 외교관계 및 각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그 양상에 상당한 변화가 나타난다. 使行 기간에 이루어지는 무역은 公貿易과 私貿易으로 나뉘어 지는데, 公貿易은 ‘進貢’과 ‘回賜’를 의미하고 私貿易은 다시 公人 私貿易과 밀무역으로 구분된다. 公人 私貿易은 使行員이 여비 부족을 보충하고 개인적인 이득을 위해 일정한 양의 인삼 등을 가져가 무역하도록 한 것이고, 일반 백성의 국경왕래나 교역은 엄금되었기 때문에 私商들은 使行이라는 기회에 밀무역을 통해 영리를 추구하였다.

이밖에 책봉조공관계에 기반을 둔 使行은 문화교류의 주요한 통로이기도 했다. 使行 과정에서 양국의 관료 사이에 직접 교류가 이루어졌고

그 과정에서 선진문물에 대한 지식과 국제정세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또한 使行에 학자나 승려가 동참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도 문화 교류에 크게 기여하였다. 17~18세기 예수회 선교사들이 중국에 전해 준 기독교 교리와 유럽의 초기근대문물을 朝鮮의 사대부들이 使行 과정을 통해 수용하여 西學으로 발전시켰던 사실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동북아 질서는 딱히 협력의 사례나 갈등의 사례 어느 한쪽으로 규정하기 어려운데, 그 체제 안에서 온갖 사건과 현상이 벌어졌고 각국의 이해가 충돌하기도 하고 어렵사리 타협과 균형을 이루어져 질서를 형성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모든 관계의 바탕을 이루었던 관계이기 때문에 동북아의 역사경험을 이해하는 데에 더더욱 필수적이다. 동북아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공동의 역사인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 방면에 대한 포괄적인 역사연구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중국 중심의 中華主義的 세계질서의 추이와 한·일의 인식 및 대응이나 국제관계로서의, 무역경제관계로서의, 문화교류의 장으로서의 ‘조공책봉관계’의 역사적 성격, 근대 이후 동북아 질서의 갈등과 모색 등이 구체적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동북아의 해상교역네트워크

#### 【협력】

동북아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일본열도와 사이에 동해와 남해가 있고, 중국과 한반도 사이에는 황해라는 ‘지중해’가 있다. 그리고 한반도의 남부와 일본열도의 서부, 그리고 중국의 남부지역은 이른바 동중국해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지리적 여건상 동북아 3국의 교역은 해로에 힘입은 바 매우 크고 일찍부터 일정한 해상교역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활발한 교역활동을 전개하였다. 최근에는 이를 地中海的 형태와 성격으로 평가하면서, 동북아의 역사를 이해하고 향후 동북아에 바람직한 共同圈域을 설정하는 틀로서 이른바 ‘동아시아 지중해(East Asian

Mediterranean Sea)’ 모델이 제시되기도 하였다.

동북아 해상교역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작동되는 과정에서 한반도는 지리상의 이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경우 해상교역네트워크를 주도하면서 크게 번영할 수 있었다. 삼국시대 百濟의 ‘海上帝國的’ 성격이나, 통일신라시대의 張保臯를 비롯한 해상호족들의 활동, 동해 건너 일본까지 가서 무역활동을 했던 渤海의 상인들이 그러한 범주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려 태조 王建도 바다에서 일어나 바다를 장악하면서 후삼국을 통일하고 고려왕조의 기틀을 잡을 수가 있었다.

특히 張保臯의 사례에서 보듯이 민간의 경제교류는 동북아 3국에 모두 지극히 득이 되는 대표적인 협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현재 이런 저런 갈등요소가 있음에도 동북아 3국의 우호관계를 지탱해주는 최대의 보루는 민간의 경제교역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문헌자료는 물론이고 고고학적 자료를 충분히 활용하여 고대에서부터 근대에 이르는 동북아 해상교역네트워크의 역사를 소상하게 밝히고 그 역사경험을 공동으로 인식하는 일은 동북아가 화해와 협력으로 나아가는 데에 둘도 없는 기반을 제공해 줄 것으로 믿는다. 구체적으로 황해를 무대로 한 한·중·일 3국의 해상무역활동, 張保臯의 해상교역활동과 동북아 무역시스템, 역대 한중일 해상교통로의 성립과 변천, 근세 동북아 삼국무역의 전개과정, 근대 이후 동북아 지역경제시스템의 성립과 변천 등과 같은 방대한 주제가 우리를 접근을 기다리고 있다.

#### 동북아 3국의 전쟁과 평화

#### 【갈등】

이제까지 동북아 3국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3국을 묶어 주는 협력의 역사경험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중일 3국의 역사적 관계를 살펴볼 때 평화적인 교류와 협력만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이 그에 못지않은 술한 갈등과 분쟁이 있었고 그것이 절정에 이르러 전쟁으로 치닫곤 하였다. 그런데 한중일 3국이 모두 개입되는 갈등

내지 전쟁은 대개 일본이 어느 정도 국력을 축적하는 근세 이후의 일이고, 일본이 제국주의국가로 등장하는 근대 이후에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동북아가 진정한 평화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는 협력의 역사경험을 충분히 살릴 필요가 있지만 이와 더불어 갈등의 역사를 직시하고 여기에서 ‘반성을 통한 교훈’을 얻을 필요가 있다.

#### 白江戰鬪

【갈등】

동북아 3국이 모두 개입된 최초의 전쟁은 아마도 羅唐聯合軍의 백제 침공에 대해 倭國이 百濟救援軍을 보내 치른 白江戰鬪일 것이다. 서기 663년 8월, 충남 장항과 군산을 가르는 금강 하류와 서해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濟倭聯合軍과 羅唐聯合軍이 뒤엉킨 국제대전이 벌어졌던 것이다.

#### 麗蒙聯合軍의 일본 원정

【갈등】

다음으로는 麗蒙聯合軍의 일본 원정을 들 수 있다. 13세기 후반 일본인들이 ‘神風’이라고 칭송해마지 않는 태풍과 몽고의 무리한 지배정책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저항으로 실제 원정이 이루어지지는 못했지만 당시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몽고 元나라와 해전에 취약한 몽고를 대신해 수군을 준비했던 고려, 그리고 원정 대상으로서의 일본이 개입되었던 군사적 갈등이었다.

#### 壬辰倭亂

【갈등】

壬辰倭亂과 丁酉再亂이라고 하는 한국에서의 七年戰爭(1592~1598)도 동북아 세계대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다. 일본의 침략으로 일어난 이 전쟁은 조선과 일본만의 전쟁이 아니라 명나라도 참전한 동북아 3국의 국제전쟁으로 비화되었다. 류큐(琉球)마저 일본 사쓰마번(薩

摩藩)의 파병 요구를 7,000인분의 식량 10개월분으로 대신하고 명나라 군대 편에서 가담하였다.

그리하여 동북아 전체에 끼친 영향이 대단히 컸다. 조선의 경우 가장 피해가 심하였음은 말할 것도 없고, 통치체제가 급격히 붕괴되어 수취체제의 개편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신분제의 현저한 변화로 질서체계의 이완현상을 초래하였고, 상품경제와 화폐경제가 발달하면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에 걸친 총체적인 변동을 몰고 왔다. 그리하여 조선시대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구분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요토미 정권이 붕괴되고 토쿠가와 시대(德川時代 : 江戸幕府)로 전환되었는가 하면, 류큐가 사쓰마번에 의해서 1609년 무력지배를 받게 되었으며, 明朝마저 얼마 후인 1644년 청조에 의해 교체되었다.

#### 清日戰爭에서 中日戰爭까지

#### 【갈등】

19세기 중반 서구열강이 동북아에 침입해 들어오면서 야기된 위기상황과 한중일 3국이 각기 식민지, 반식민지, 제국주의로 分岐되는 과정에서 벌어진 전쟁의 참상은 동북아 역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19세기말 청일전쟁에서 러일전쟁, 만주사변, 중일전쟁으로 이어지는 동북아 근·현대사는 차라리 전쟁의 역사로 점철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중일 동북아 3국이 각기 역사·지리적 구조와 환경에 따라 독자적인 역사발전을 이루어오면서도 이들 3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에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어떤 契機에 사단이 발생하게 되면 그것이 인근 두 나라에도 크게 영향을 끼쳐 자체의 역사진전과정에 적지 않게 작용하는 경우가 흔히 있었다. 이런 사정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이상과 같이 동북아 3국이 모두 개입된 전쟁이다. 다른 전쟁도 마찬가지이겠지만, 壬辰倭亂만 살펴봐도 동북아 각국에 커다란 변화를 야기하였다. 조선의 경우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점이 될 정도로

극심한 변화를 겪었고, 일본의 경우는 도요토미 정권이 붕괴되고 토쿠가와 시대(德川時代 : 江戸幕府)로 전환되었다. 류큐가 1609년부터 사쓰마번의 무력지배를 받게 되었고, 明朝마저 얼마 후인 1644년 청조에 의해 교체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내부에서 일어난 사단이 내정을 포함하여 각국의 자체 역사발전에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처럼 동북아에서의 군사적 갈등이 국제정세는 물론 각국의 내정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됨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술한 전쟁들이 당사자들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에 주목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국력을 뺏내거나 남의 영토와 재화를 탐내는 한 국가의 지배욕이 자신은 물론 다른 상대국가에 되돌리기 어려운 곤란을 주게 됨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전쟁은 참혹한 것이고 그 결과는 피해만 남는다.

그런데 현재 한중일 3국의 학계는 또 다시 전쟁의 책임 문제를 두고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며 갈등하고 있다. 다시 임진왜란을 예로 들어 보면, 먼저 약 16만 대군을 동원하여 이 전쟁을 도발한 일본은 일방적인 승전으로 보기도 하였고 비록 한반도가 전쟁터로 되었지만 기실은 明을 겨냥한 침공(假道入明)이라는 입장이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장대한 세계국가구상’이라는 대의명분을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그 침략성이나 전쟁으로 겪은 조선인의 피해가 축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한국에서는 모든 것을 철두철미하게 침략으로 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쟁이란 용어마저 부정하고 ‘왜란’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勝敗論과 관련해서 조선의 완전한 승리였음을 강조한다. 중국에서는 전쟁의 국내외적 요인이나 침략자의 의도를 비교적 소상하게 열거하는 입장에 있다. 여기서도 철저히 자국의 국가적 입장이 역사연구에 투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현재 동북아 3국의 역사 인식과 관련 일반적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 근대 이후 동북아 민간 네트워크

## 【협력】

근대 이후 동북아 각국이 帝國主義와 (半)植民地로 分岐되면서 정치·군사·경제적으로 갈등구조에 휩싸이게 되지만, 서구의 새로운 지식과 문물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문화요소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를 담당하는 민간인들 사이에서 다양한 ‘동북아 네트워크’가 구축된다. 이들은 국가권력과 일정한 연계는 갖지만 기본적으로는 민간차원의 네트워크로 볼 수 있다. 예컨대 일본의 영화제작회사와 영화배급회사를 축으로 만주와 조선, 중국의 상해와 북경의 영화사 사이에 일정한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고 한다. 이러한 부류의 네트워크는 다양한 영역에서 구축되고 작동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서구의 신지식을 수용하는 학술 네트워크, 사회사업을 위한 네트워크, 예술가들 사이의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가 가능하다. 물론 이들도 일정 정도 자국의 이해를 대변하려는 경향을 보였겠지만, 근대시기 一國의 경계를 넘나드는 (trans-national) 네트워크의 역사경험은 동북아가 화해와 평화를 위한 ‘공동의 집’을 지어나가는 데에 소중한 밑거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III. 韓中의 이슈

한국과 중국 사이의 역사적 관계는 정치적·군사적 상관관계와 경제·문화적 교류가 각 시대별로 다양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다. 특히, 중국 왕조 내부의 정치적 성쇠와 우리 역사의 다양한 전개양상이 연계되어 대개 정치적 공존과 군사적 충돌, 경제·문화적 교류가 상호 교차되면 병존해 왔다.

#### 중국 사서에 나오는 ‘東夷’의 성격과 역사적 전개 【갈등】

‘東夷’에 대해 서술한 대표적 중국문헌은 『三國志』, 『魏志 東夷傳』과 『後漢書』, 『東夷傳』이며 후자의 내용은 전자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주지하듯이 ‘東夷’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쪽의 이민족’을 가리키는 말인데 秦의 중국통일을 기점으로 지칭하는 구체적인 대상이 달라진다. 秦 통일 이전(先秦)에는 지금의 山東을 경계로 동쪽에 살던 종족을 포괄적으로 지칭하였으나, 秦의 통일로 山東이 중국에 편입되면서 그 경계선이 동쪽으로 밀려가게 되고 이후의 東夷는 遼東을 경계로 한반도를 포함한 지역을 가리키게 되었다.

근자에 이런 역사적 사실을 두고 한국과 중국 역사학계가 상반된 입장을 취하면서, ‘東夷’의 역사적 성격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먼저 중국은 “戰國 이전 東夷”가 중국민족 형성의 중요한 요소라는 점을 전제로 “漢代 이후 東夷”가 전자와 동일계통임을 강조하여 중국민족사의 범주를 확대하고 遼東(東北 또는 滿洲)지역에 대한 연고를 강조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戰國 이전 東夷”는 중국사의 영역으로 이해될 만하지만 “漢代 이후의 東夷”는 한국사의 범주에서 논의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양자간의 불연속성을 강조한다.

‘東夷’라는 이슈는 그 자체로만 놓고 보면 갈등의 사례도 협력의 사례도 아닌 가치중립적인 사안이지만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한 이슈이다.

지금은 그 정체성이 소멸되어 버렸지만 ‘東夷’라는 개념 속에 포함되어 있던 수많은 민족이나 문화공동체 또는 역사공동체가 존재했었다는 사실을 밝힐 필요가 있다. 東夷를 가르는 경계가 동쪽으로 밀려가는 것은 바로 중국의 팽창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 안의 수많은 정체성이 소멸되는 과정을 의미한다. 그 안에는 한국이라는 역사공동체의 영역이 축소되는 과정이 포함되어 있다. 그 경계가 동쪽 끝에 다다르면 한국이라는 역사공동체의 정체성도 소멸할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東夷’ 문제가 한중 양국의 고대사 귀속문제 및 영역문제를 둘러싼 논쟁 가운데 중요한 話頭로 떠오른 것도 그러한 연유 때문이다.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된 중국의 팽창은 의도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 안에 존재했던 다양한 정체성이 소멸되었다는 점에서 한중관계는 물론 동북아 전체에 걸친 갈등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史實을 분명히 밝혀 드러냄으로써 중국인들의 되새김을 촉구하고 우리의 경계로 삼는 일은 동북아가 새로운 평화를 모색함에 요긴한 일 중에 하나이다.

#### 衛滿 集團 이주와 ‘衛滿朝鮮’의 성립

【중립】

衛滿은 『史記』, 『漢書』, 『三國志』 등에 모두 燕나라 사람으로 되어 있으나, 위낙에 고조선 사람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漢高祖에 의해 燕王에 봉해진 盧縮의 부하 장수로 있다가 盧縮이 모반을 꾀하여 匈奴로 달아나자, 기원전 195년 1000여 명의 수하를 이끌고 고조선의 準王에게 의탁해 왔다. 이에 準王은 그를 博士로 삼고 서쪽 경계를 지키게 하였다. 이후 眞番, 燕, 齊의 유민들을 통솔하고 그들과 결탁하여 세력을 키우던 중, 기원전 194년 王儉城을 공격하여 準王을 내몰고 새 왕조를 세웠는데, 국호는 계속 해서 조선이라 칭하여 이를 衛滿朝鮮이라 한다. 한편, 準王은 남쪽 韓으로 망명하여 韓王이라 칭하였고, 衛滿王은 眞番, 臨屯을 服屬시켜 영토를 확장하였다.

衛滿은 중국의 선진문화를 체득하고 있는 인사로서 무리를 이끌고 우리역사에 들어와 영향을 끼친 최초의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사방의 토착부족세력과 연맹을 맺고 정권을 유지하면서 중국과 토착사회를 연결하는 중간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집단 이주민이 선진문화를 전파한 한 가지 사례로 볼 수 있다. 예컨대, 그들은 명확히 문자(漢字)를 체득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들이 고조선에 들어와 정치권력까지 장악한 상황이 되었으니 고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한자를 수용하는 중대한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다. 동북아 문화권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집단 이주민에 의한 문화전파의 사례는 다른 시기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찾아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準王과 衛滿의 정권 쟁탈은 ‘갈등’의 사례로 볼 수 있으나 또 다른 차원에서 보면 문화 수용 및 발전이라는 ‘협력’의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 문화교류라는 관점에서 衛滿에 대한 새로운 조명이 필요하다.

#### 漢四郡의 설치와 韓中文化交流

#### 【중립】

漢四郡은 기원전 108~107년 漢武帝가 衛滿朝鮮을 멸망시키고 그 지역에 설치한 4개의 행정구역으로서 樂浪, 臨屯, 玄菟, 眞番郡을 말한다. 한사군은 漢나라의 직할영토에 편입되어 관할 縣을 설치하고 郡에는 太守, 縣에는 令 등의 소속장관과 屬官을 한나라 중앙정부에서 파견하였다. 그러나 한사군의 통치는 형식적이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우선 기원전 82년 진번과 낙랑이 통폐합되고 임둔은 현도군에 통폐합되어 각 郡은 이미 지나치게 넓은 지역을 포괄하게 되어 통치력을 관할지역에 미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기원전 75년 토착세력의 저항으로 낙랑군을 제외하고는 전부 소멸되어 존재했던 기간이 30여년에 지나지 않았다. 낙랑군은 313년~315년에 걸쳐 고구려 美川王에 의해 멸망되었는데 낙랑이 비교적 장기적으로 존속될 수 있었던 것은 중국과의 교섭 및 교류를 위한 창구로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漢四郡은 마지막으로 낙랑군이 패망할 때까지 약 400餘年 동안 遼東에 존속하면서 동북아 일대의 문화적 통로로 작용하였다. 漢武帝 때에 황하 서쪽에 설치된 河西四郡이 중국과 서역을 잇는 실크로드로 기능 하였듯이 關東에 설치된 遼東四郡(漢四郡)도 중국과 한국, 일본 등을 잇는 실크로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다. 예컨대 한사군이 설치된 이후 중국의 수많은 관리, 군인, 학인, 상인, 기술자, 농민, 일용노동자 등이 지속적으로 한국방면으로 흘러 들어왔다. 이들은 중국의 고급 문물을 직접 휴대하여 왔을 뿐 아니라 한국에 와서 문화용품을 제작하거나 기술을 원주민에게 전수하기도 하였다. 이를 통한 중국선진문화의 유입은 한국 토착사회에 문화적 충격을 가하며 한국토착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이처럼 활발한 문화의 유입은 낙랑군 지역 및 한반도[三韓]지역의 유적발굴을 토대로 확인된다.

한사군의 설치는 한국의 문화도 중국으로 유입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주었다. 대표적인 사례는 조선의 公無渡河歌가 중국으로 전래되어 중국 晉의 崔豹가 지은 『古今注』 「樂府」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古今注』는 이 노래가 朝鮮으로부터 전래되었고 중국인들 사이에 널리 회자되었음을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한사군의 설치는 식민사관에서 강조하듯이 정치적 지배의 상징으로서만이 아니라 고대 국가간 문화교류의 접점으로서도 기능 하였다.

한편, 고구려는 낙랑군마저 축출하고 그 영토를 편입시킴으로서 남진의 거점을 확보하고 한국의 일원으로 편입될 기틀을 마련함과 동시에 한반도의 서해안을 통해 중국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되었다. 또 요동의 거의 전역이 고구려에 의해 점유되어 이런 상태가 향후 300년 넘게 지속되었다. 이로 인해 한중관계사의 흐름도 크게 바뀌었는데 요동의 국가가 한국의 일부로 편입됨에 따라 한국과 중국은 요동을 경유하지 않고 직접 교류할 수 있게 되었다.

이처럼 漢四郡의 설치는 고조선의 영토를 점령했다는 점에서 한중간의 갈등 사례로 볼 수 있지만 문화교류의 통로로 작동되었다는 점에서

는 협력의 역사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있다. 향후 문화교류의 측면에서 한사군의 의미를 더욱 더 소상히 밝히고 관련된 역사인식을 공유함으로써 동북아 평화에 기여하는 역사경험으로 되살릴 수 있을 것이다.

#### 중화질서 구축에 저항한 高句麗와 高句麗史 歸屬問題 【갈등】

漢四郡은 漢武帝가 막강한 군사력으로 동북아 지역에 중화질서를 체계화하려는 데에 독자적 문화권을 가지고 고대국가로서의 틀을 다져 나가던 고조선이 대항하자 나타났던 결과였다. 당시 遼東은 漢朝의 직접 통치력이 미치지 어려운 변방으로서 무력으로 점령하였더라도 國이라는 간접통치지역에 편입시켜야 마땅했음에도 郡이라는 직접 통치 행정단위를 설치한 것은 역으로 고조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훨씬 독자성이 강했음을 보여준다.

이런 고조선의 독자성을 계승한 고구려는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과정에서 漢四郡이 문제가 되었고, 중국의 직접적인 지배체제인 郡縣統治에 반발한 고구려인의 저항에 의해 한사군의 초기 설치형태는 곧 와해되고 이에 수반해 동북아 지역에 대한 통치질서를 수립하려는 중국의 의도 또한 좌절되었다. 사실 고구려는 하나의 정치세력으로서 출발하는 순간부터 주변국에 대한 정복을 통해 발전해 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고구려의 특성은 최근 부각된 高句麗史 귀속문제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980년대까지 고구려는 고조선의 문화전통을 계승한 국가로서 한국사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었다. 고구려가 東夷 가운데 가장 강대한 민족이었고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가진 국가였음은 한중 역사학계에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중국에서 高句麗史를 중국사로 귀속시키려는 견해가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이 와중에 고구려의 대외관계, 특히 고구려의 中國에 대한 투쟁과정과 관련해서 독자적 국가의 대외확장이었음을 부정하려는 관점이 부각되었다. 즉 고구려가 중원왕조의 衰弱을 틈타 대외확장을 추진한 것을 자의적인 약속위

반으로 파악하고 중원정권의 무력정벌이나 慰撫策은 고유한 통치관할권을 유지하기 위한 행위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은 고구려가 중국 소수민족의 지방정권이었음을 주장하려는 다양한 시도 가운데 하나이다.

또한 高句麗史가 중국사의 일부라는 주장의 핵심적 논거는 고구려의 民族的 源泉이 중국 다민족의 일원이었고, 중국 경내에서 건립되었으며 그 관할 범위도 중국 영역의 내부이며 시종일관 중원왕조와 종속관계를 유지하며 중원정권을 대신하여 변경지역을 통치하였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기 위해 중국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최근 고구려는 물론 고조선, 부여, 발해 등 東北三省(遼東) 지역의 역사 연구를 추진하는 ‘東北工程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東北三省 지역을 본격적인 연구대상으로 삼아 高句麗史 및 고대사 귀속문제에 대한 학술적 근거를 꾸준히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동북공정에 속한 모든 연구의 목적은 동북지역의 역사연구를 통해 그 곳의 영토와 외교권 등이 중국에 속한 것임을 천명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한국 역사학계는 “중국 내부의 多元的, 分散的, 遠心力的 사회변화와 맞물려 표출되는 민족적·지역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중국적 해법”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개방개혁 이후 중국에서는 동남 연해 지역과 소수민족이 거주하는 내륙지역 간의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르면서 위구르, 티베트 등 일부 소수민족이 분리 독립을 추진하는 등 민족적 위화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한반도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재외동포특별법” 제정과 재중동포의 국적회복운동, 탈북자 문제 등이 중국 동북지역 사회의 안정을 해칠 우려까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상황을 탈피하기 위한 “중국의 동북공정은 ‘현재’의 필요에 의해 역사를 재단하는 ‘以古爲今’의 전형적 사례이며 ‘현대판 華夷觀’이 표출된 뼈뿔어진 역사인식”이라고 비판할만하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런 중국의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공동번영에 기여하는 역사인식을 제안하기 위해서라도 高句麗史 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때이다.

## 3세기 魏나라의 고구려 침공과 실패

## 【갈등】

고구려와 魏나라는 공동으로 燕을 정벌한 적도 있었으나 고구려가 요동으로 진출을 모색하자 완충지대로 남아있던 요동의 현상유지를 희망하던 魏나라는 서로 대립할 수밖에 없었다. 242년부터 약 7여년에 걸친 양국의 전쟁은 259년에 위나라 장수 尉遲階의 침략군이 고구려 梁貊谷에서 대패함에 따라 군사 8천여 명을 잃고 후퇴하는 것으로 끝이 났다. 한반도 북부와 만주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요동지역을 장악하려는 고구려의 의도가 성공한 것이다. 이는 고대에 한 중간에 있었던 수많은 전쟁, 즉 갈등사례의 하나이지만 관련 내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사안이다. 향후 보다 소상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 중국과 삼국시대 불교의 수용

## 【협력】

## 前秦의 승려 順道와 고구려의 불교 수용

## 【협력】

372년 前秦王 苻堅이 使臣과 僧侶 順道를 고구려에 보내어 佛像과 佛經을 전하였고 이것은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된 시초가 되었다. 이 시기 중국은 南北朝로 분열되어 있었고 한국도 三國이 정립되어 있던 국면이었다. 고구려는 건립되면서부터 중국의 역대왕조와 이웃하고 있었고 공통의 변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과 크고 작은 투쟁을 하였다. 그러나 평화 시에는 중국과 왕래가 가장 많았으므로 중국문화의 영향도 갈수록 많이 받았다. 하지만 총체적으로 본다면 삼국은 모두 중국과 이웃하고 있었고 동일한 유형의 문화적 심리상태에 속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인 차이는 있었어도 중국불교가 수용되는 것 자체는 삼국에게 모두 필연적인 일이었다.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되었던 당시, 前秦은 前燕을 멸망시키고 영토를 遼寧 서부까지 확장하고 있었고 고구려는 북방 鮮卑族의 침입을 막기 위해 중국 내에 우호적인 세력을 필요로 하고 있었다. 양자간 국방



을 공고히 해야 하는 정치적 목적아래 이후 천여 년에 걸친 불교문화의 교류가 시작된 것이다. 즉 양국의 불교문화교류는 이때부터 15세기 초 (중국으로는 명나라 초기, 한국으로는 조선초기)까지 지속되었는데 이렇게 유구한 교류의 역사과정은 한중 양국사이에서 뿐만이 아니라 세계문화교류의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이다.

#### 東晉의 摩羅難陀와 백제의 불교수용

#### 【협력】

384년 백제는 東晉에 사신을 보내어 조공을 하였고 이에 東晉에서는 승려 마라난타를 보내었는데 이로써 백제의 불교가 비롯되었다.

《三國史記》에 따르면 고구려가 “罽那 王이 승려를 파견하여 불상과 불경을 보냈으며 이에 고구려 소수림왕은 감사를 표하며 방물을 공납하였다”고 한 것에 비해 백제는 “枕流王 즉위 원년에 중국으로 조공사절을 보냈고 이에 마라난타가 罽那에서 파견되어 佛法이 시작”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 고구려보다 더욱 불교수용에 적극적 자세를 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고구려의 불교수용문제가 소략하게 기록된 것에 비해 백제의 수용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東晉으로부터 파견된 마라난타는 백제왕의 융숭한 대접을 받았고 이러한 국왕의 자세가 사방으로 전파되어 백제 전국에 불사가 크게 넓어지고 불교가 흥성하게 되었다.

이상 삼국시대 이래 지속된 양국간 불교문화의 교류는 불경과 불상의 전래에 국한되지 않고 留學僧 파견, 승려들의 詩話 문답 및 승려를 통한 典籍 교류 등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졌는데 한중 양국이 오랜 협력의 과정을 거쳐 문화를 발전시켜나간 대표적 사례라고 하겠다.

오늘날에도 불교는 漢字, 儒學과 함께 아직도 한중 양국 공통의 문화요소로서 공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이 역사적 맥락에서 문화적 동질성을 인식함에 매우 유용한 매개가 될 수 있고, 이런 점에서 심도 있는 역사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불교계 인사들의 교류는 상

호이해를 높이는 데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渤海의 唐나라 登州 공격과 渤海 西邊 및 歸屬問題 【갈등】

渤海가 唐나라의 登州를 공격했던 사건은 역사상 갈등의 사례이기도 하고, 발해의 서쪽 국경이 중국 역사학계의 일반적인 주장처럼 한반도 안의 평안도 부근이었는지, 아니면 한국 역사학계의 주장처럼 遼東 지역을 포함하고 있었는지를 살필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발해는 732년 山東에 위치한 登州를 바닷길을 이용해 공격하였고 이듬해에는 돌궐의 원병을 얻어 당을 공격하던 거란을 도와 遼西지역의 馬都山(=都山)까지 공격하였다. 발해의 馬都山 공격은 요동 육로를 통해 이루어진 것인데 발해가 어떤 방식으로든 西邊에 요동을 장악하고 있지 않았다면 불가능한 것이었다. 그렇다면 요동이 발해의 영역이었던 시기는 중국 역사학계 일부가 요동의 渤海領域說을 인정하면서도 그 시기가 安史의 亂 이후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늦어도 발해가 당나라의 登州와 馬都山을 공격했던 732년 이전으로 소급하는 것이 타당하다.

발해의 서쪽 국경이 요동을 포함하고 있는가의 문제는 현재의 영토가 과거 渤海國의 일부에 속하는 한국과 중국, 러시아 심지어 일본의 역사학자들에게 渤海史의 귀속문제와 결부되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중국 역사학계는 高句麗史 문제와 더불어 한국 역사학계와 대립하고 있다. 『遼史』 「契丹國志」와 『金史』 등 중국의 史書가 요동 지역이 발해의 영역이었음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역사학계는 唐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킨 뒤 세웠던 安東都護府가 요동지역까지 관할하였다는 주장을 펴면서 요동의 고대사를 중국사로 편입시키려고 한다. 하지만 안동도호부는 단순한 계획상의 都護府 조직을 가지고 있었을 뿐 전면적인 통치력을 갖지 못했다는 것은 발해 건국과 관련된 사료에서 입증되고 있는 바이다. 그러나 요동이 발해의 영역에 포함되

있다고는 하더라도 과연 발해는 그 지역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지배력을 행사하였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渤海史 歸屬問題를 둘러싼 한중간 시각 차이를 해소하고 공동의 역사인식을 확대하기 위해서 시급히 연구되어야 할 과제이다.

#### 隋唐의 고구려 침공과 실패

#### 【갈등】

589년 隋나라는 魏晉南北朝시대라고 부르는 혼란시기를 수습하고 중국을 통일했다. 중국이 다시 하나의 강력한 제국에 의해 일원적으로 지배되자 이 새로운 상황은 동북아 질서의 전면적 재편과 한중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강요하였다. 즉 중국의 남북조와 돌궐, 고구려·백제·신라 사이의 세력균형으로 유지되던 동북아 질서가 새롭게 편성되어야 했고 이 과정에서 주도권을 둘러싼 투쟁이 격화되었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고구려와 수나라의 군사적 충돌이었던 것이다.

598년, 612년 두 차례에 걸쳐 수나라는 요동으로 침략하였고 당시 요동을 점유하고 있던 고구려의 강한 저항을 받았다. 이런 과정에서 백제는 막강한 상대국인 고구려의 예봉을 꺾기 위해 수나라의 고구려 침공기회를 놓치지 않고 사신을 수나라에 보내 수군의 길 안내를 자청하였다. 이에 대한 앙갚음으로 고구려는 수나라가 철수하자마자 백제 국경을 침범하였다. 이는 결과적으로 한중간의 관계가 한반도 내부의 정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작은 사례이다.

아무튼, 수륙 양면으로 진행된 隋의 침공은 薩水大捷에서 고구려에 대패함으로써 실패로 끝났다. 이로써 요동을 차지하려던 수의 의도가 실패로 끝났을 뿐 아니라 무리한 전쟁의 연속으로 수나라 내부의 동요가 일어나 멸망을 재촉하고 말았다. 한편 고구려도 거둬드는 수의 침공을 격퇴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지위를 신장시켰으나 많은 국력의 소모로 뒷날 멸망에 이르는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되었다.

隋를 이어 唐이 다시 중국을 통일하자 唐나라 역시 당시 대치 국면

에 있던 고구려, 백제, 신라의 관계에 개입하였지만 唐은 隋의 패망을 거울삼아 신중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隋나라와의 전쟁 중에 신라가 고구려를 침공했던 일을 들어 고구려가 신라의 黨項城을 점령하는 등 압박을 가하자, 신라는 唐에 지원을 요청하였고 644년 唐太宗은 고구려에 신라와의 화해를 권고하였다. 그러나 고구려는 唐太宗의 요구를 물리치고 그의 사신 蔣儼을 구속하는 등 강경책으로 대응하였다. 이에 격노한 唐太宗이 645년 17만의 대군을 이끌고 침입하였다. 이에 高句麗軍은 蓋牟城, 遼東城, 白巖城 등에서 적에게 큰 타격을 가하고 마침내 安市城의 혈전에서 60여 일간의 공방전 끝에 唐軍을 격퇴하였다. 그 후에도 4차례나 당나라의 침입을 받았으나 이를 모두 막아냈다.

이는 역사상 군사적 충돌이 야기하는 참혹함과 해당 국가에 끼치는 피해를 잘 보여주는 갈등사례이다. 중국은 자기중심적 국제질서를 타국에 강요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멸망하는 길을 재촉하기도 했고 한국은 민족사적 관점에서 볼 때 상호 갈등이 외세의 군사개입까지 초래하는 상황을 맞이했고 이는 민족사의 정체성이 소멸될 수도 있었던 위기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우리는 역사상 상대국에 대한 자기중심적 이해관계의 강압적 요구와 이에 수반된 군사행동이 모두에게 얼마나 危害한 일인지를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러한 역사인식의 공유는 동북아의 평화에 밑거름이 될 것이다.

#### 羅唐聯合軍과 삼국의 통일

#### 【갈등】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것은 한국 민족사에 커다란 획을 그었다. 고구려, 신라, 백제의 분립으로 언어와 풍속이 각자 따로따로 발전하고 있었으나, 통일이후에는 같은 민족으로서 언어, 생활, 풍속이 통일성을 이룩하는 기틀을 이루었다. 이로써 한국사 진행과정에 융합과 단일화의 방향이 개척된 것이다. 비록 고구려의 땅을 대부분 잃는 불완전한 통일

이었고 융화정책에도 한계가 있었지만 이후 통일정권이 지속적으로 계승되는 장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의는 크다. 삼국 가운데 가장 늦게 국가의 기틀을 세웠던 후발주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국제정세를 이용하여 강대국 당나라를 끌어들이고 후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한반도 통일과정에서 신라와 당나라가 연합한 것은 양국의 정치적 이해가 완전히 합치되었기 때문이다. 신라는 5세기 중반까지 고구려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고 고구려와 백제보다 1세기 이상 뒤진 6세기 이후에 이르러서야 독자적 국가형태를 완성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의 틈바구니에서 수시로 연합국과 적국을 바꾸며 고전하던 신라는 수나라에 이어 唐이 중국을 통일하자 당나라와 연합함으로써 나당연합이 결성되었다. 이런 상황 전개는 곧 唐·新羅 對 高句麗·百濟·倭國으로 연결되는 두 진영으로 나뉘어 대립하는 형세로 치닫게 되었다.

나당연합군에 의해 백제와 고구려가 차례로 멸망하자 唐은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려는 야욕을 보였고 이에 羅唐戰爭이 발발했다. 670년부터 약 6년여에 걸친 전투 끝에 신라는 당나라가 고구려 멸망 이후 평양에 설치했던 안동도호부를 요동지역으로 물리치면서 삼국통일을 완수할 수 있었다. 사실 한국의 민족사적 관점에 볼 때 나당연합군의 결성에 따른 외세의 군사적 개입은 한국이라는 역사공동체의 정체성이 소멸할 수도 있었던 절세절명의 위기였다. 선불리 외세를 개입시킨 것이 결과적으로 과오이기도 했으나(당시의 국제관계에 대한 패러다임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었음), 신라가 고구려 및 백제의 유민과 합심하여 唐나라 세력을 물리치지 못했다면 정체성을 유지하거나 다시 회복하는 일이 매우 어려웠을 것이다.

나당연합의 결성에 있어 당나라의 입장은 隋煬帝나 唐太宗이 고구려를 침공했을 때와 같은 맥락에 있었기 때문에, 이 사안도 갈등사례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세력쟁탈전이 곧 동북아 전체의 대립구도로 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반도의 평화가 곧 동북아

지역의 평화로 이어진다는 명제를 연상시킨다. 우리는 이런 사례를 통해 전쟁에 대한 ‘반성의 교훈’을 얻고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의 평화에 끼치는 영향을 인식할 필요가 있겠다.

고구려 遺民의 長安 이주와 高仙芝

【협력】

고구려를 멸망시킨 唐은 수차에 걸쳐 고구려의 유민을 분산시켜 당의 수도 장안과 요동 서쪽 등으로 흩어져 살게 하였다. 주된 대상은 平壤城을 비롯해 당의 침략에 끝까지 저항했던 지역의 지배층과 백성들이었다. 고구려 유민의 분산정책은 그들을 분산시킴으로써 고구려 부흥운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것이었다. 681년 寶臧王을 귀양보내고 요동에 모여 살던 고구려 유민을 다시 분산시켰는데 이때 젊은 高舍鷄가 만리장성 서쪽 끝에 자리한 河西지역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다. 高舍鷄는 河西軍에 들어가 당나라 군사가 되었고 그의 아들이 ‘동양의 알렉산더’라고 칭송 받는 高仙芝이다.

『舊唐書』, 『新唐書』, 『資治通鑑』 등 중국사서에는 高仙芝를 고구려 사람이라고 적고 있으며 특히 『자치통감』에는 고선지가 세운 전공을 시기한 安西節度使가 “더러운 고구려 놈”이라고 욕설을 퍼부었다는 기록까지 실려 있다. 高仙芝는 서쪽으로 팽창하던 당의 군사노선에 참가하였는데 747년~750년 3차례의 서역원정에서 혁혁한 공을 세워 당의 현종은 그를 河西節度使에 임명하고 右羽林軍大將軍에 봉했으며 755년에는 密雲郡公이라는 작위까지 받았다. 그러나 安祿山の亂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담당지역을 무단 이동한 사실 때문에 진중에서 참형되는 최후를 맞았다.

高仙芝의 활약이 상세히 밝혀진 것은 프랑스의 동양학자 샤반느와 영국의 스타인 등이 각기 중국문헌을 재검토하고 高仙芝의 전적지를 답사하며 高仙芝의 사적을 발굴, 탁월한 전략가였다는 평가를 내리면서 부터이다. 이와 함께 세계 최초로 섬유질 製紙術이 유럽에 전파된 일이

高仙芝와 관련 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高仙芝는 여러 가지 형태로 韓半島人이 중국에 이주하여 체류하면서 영향을 끼쳤던 사례 중에 하나이다. 이처럼 한국 사람이 일본은 물론 중국에 이주한 역사는 의외로 길고 그 사례도 다양하고 많다. 단지 이에 대한 관심이 적었을 뿐이다. 이런 직접적인 인적교류는 문화교류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체류하고 있고 일상적인 인적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이주와 인적교류의 역사 경험은 한중 양국이 상대를 우호적으로 인식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 新羅坊과 한중교역

#### 【협력】

삼국통일 이후 公的, 私的 무역이 발달하면서 신라인의 해상활동이 활발해졌다. 이에 따라 신라인들은 당나라의 해안지대인 登州, 楊州, 楚州 지방에 이주하여 집단거류지를 이루었는데 이를 新羅坊이라고 부른다. 여기에는 고구려, 백제의 유민들도 대거 유입되었다. 이들 중에는 私貿易에 종사하는 상인이 가장 많았고 승려들도 많아서 山東省 文登縣 赤山村에 있던 法花院이라는 신라인의 절에는 남녀 道僧이 250명 이상 모여 있던 적도 있었다. 특히 신라에서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인 山東半島의 登州, 密州 일대는 일찍부터 신라인이 거류하는 것으로 유명하였으며 登州에는 신라의 사신, 留學僧을 유숙시키고 접대하기 위해 新羅館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라방의 거류민을 다스리기 위해 자치적 행정기관으로 新羅所를 설치하여 摠管, 押衙 등의 직원을 두어 사무를 맡아보게 하였다. 신라방은 張保臯가 해상무역을 장악하면서 더욱 번창하였다.

이는 직접적인 인적 관계 및 교류에 해당되는 사례이다. 현재 중국 영토 안에 한국역사의 흔적이 남아 있다는 사실은 한중관계의 密接性을 보여줄 것이고 이런 역사경험에 대한 인식이 공유됨으로써 한중간

에 친밀감이 높아지고 이는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될 것이다.

#### 한중의 문화교류와 동북아 문화의 발전

#### 【협력】

기존의 연구에서 중국문화의 한국문화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만 반대로 한국문화가 중국문화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는 연구가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물론 중국과 한국은 문화창조의 환경이나 역량의 규모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문화의 중국 유입보다 중국문화의 한국 전래가 훨씬 더 많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음은 오히려 자연스런 일이다. 그럼에도 韓中文化交流史가 말 그대로 交流史로 서술되어야지 일방적인 流入史로 서술되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이 방면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보다 많은 연구성과가 풍부하게 축적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된다면 보다 균형 잡힌 한중관계사 서술이 이루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문화교류라는 대표적인 협력의 역사가 당사국 모두에게 얼마나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동북아 전체에도 얼마나 이득이 되는지를 잘 보여주게 될 것이다. 이는 말할 것도 없이 평화로운 상호교류라는, 동북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을 밝혀주는 등불이 될 것이다.

다음 두 가지는 한중간의 문화교류 과정에서 한국이 일정 정도 기여함에 따라 동북아 전체의 문화수준이 제고된 사례이다. 이런 사례들이 좀 더 많이 발굴될 필요가 있겠다.

#### 인쇄술의 발전

#### 【협력】

인쇄술은 新羅와 唐이 병존한 시대부터 거의 동시에 한국과 중국에서 목판인쇄의 형태로 발전되기 시작했는데 高麗·宋時代에 이르러 중국에서 점토 활자가 개발되고 한국에서는 금속활판인쇄가 발전하였다. 한국에서 발명된 금속활자는 중국의 목판인쇄술과 결합하여 목판활자를



냥아, 朝鮮·明時代에는 한국과 중국에서 금속활자와 나무활자를 매체로 한 인쇄문화가 만개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합작으로 성취한 활자문화는 동북아의 전체 성원들에 의해 향유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양으로 전래되어 유럽의 활자인쇄문화를 낳았다.

#### 大乘佛敎文化的 발전

#### 【협력】

대승불교문화도 한중 불교문화의 융합을 통해 창출된 문화적 산물이었다. 불교는 인도에서 발생하여 중국을 경유, 한국으로 유입되었지만, 한국의 문화적 풍토에 맞도록 재해석된 다음에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 中國化한 불교와 융합되었다. 新羅·唐時期에 중국에서 활약한 한국 승려들의 왕성한 譯經과 弘法, 敎化 활동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唐代 중국불교의 만개를 설명하기 어렵다.

#### 高麗와 宋의 교류

#### 【협력】

高麗와 宋의 교류문제는 유사 이래 빈번하였던 한중의 정치·문화·경제적 교류선상에서도 이해할 수 있는 문제이지만 북방민족의 흥기가 양국 교류의 중대 원인 가운데 하나였다는 사실이 다른 시대와는 다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契丹族이 興起하여 건국한 遼, 서북방지역의 西夏, 여진족이 세운 金은 항시 北宋에게 위협적 존재였고, 금에 의해 남쪽으로 밀려 내려온 南宋은 몽고족이 세운 元의 위협을 받다가 멸망하였다. 金이나 元과 같은 북방민족이 세운 정권에 압박을 받은 것은 고려도 마찬가지였다. 이러한 상황은 송과 고려의 교류를 촉진하는 작용을 했지만, 기타 지역에 대한 양국의 대외관계는 폐쇄적 경향을 띠게 되었고 교역로 역시 육로보다는 해로를 택하게 되었다.

고려와 송의 정치적 교류 측면에서는 조공 이외의 관계가 현저하게 감소되었고 조공사행의 왕래도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민간의 관계,

특히 宋商의 내왕이 매우 빈번하였는데 이것은 해상교역로가 적극적으로 이용되어 대량의 화물수송이 가능해진 것에도 연유한다. 민간무역에서 인기리에 거래된 품목은 도자기와 동전, 비단, 약재, 차, 서적 등이었는데 수차에 걸쳐 반포된 송 정부의 교역금지 조항, 서적유출을 막아야한다는 宋代 지식인들의 논의 등은 당시 민간교역이 얼마나 활발했는가를 반증하는 사례이다. 또 다른 활발한 교류의 장은 문화적 교류이다. 이것은 주로 유학생, 의사 및 승려들의 왕래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인적교류와 더불어 서적보급이 동시에 이루어졌다.

이런 고려시기 중국과의 문화적 교류에 대해서는 비교적 최근어야 연구가 진행되어 아직도 밝혀야 할 부분이 많은 실정이다. 상대적으로 폐쇄적 대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여겨지는 고려와 송 사이에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가 풍부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한중간의 역사적 관계가 얼마나 밀접했으며 심지어 숙명적이었음을 시사한다.

#### 고려·조선시대의 북진정책 및 북벌논의와 한중관계 【갈등】

본 프로젝트에서 필자가 굳이 韓國史上의 북진정책이나 북벌논의를 이슈에 포함시킨 것은 알게 모르게 오늘날의 한국사회 안에 고조선이나 고구려의 故土를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의 영토문제와 관련되어 있어 한중간에 매우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다. 일례로 한국의 “재외동포특별법” 제정과 재중동포의 국적회복운동, 間島와 관련된 국경문제 논의에 대해 중국이 예민한 반응을 보였고 중국이 이른바 ‘동북공정’을 개시하게 된 배경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그렇다면 한중간에 참여한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는 ‘故土 회복’의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사에 유사한 역사경험이 있다면 이를 귀감으로 삼을 만하다. 이 문제는 단지 한국의 문제가 아니고 언젠가는 한중간에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 공동의 역사인식을 구축해 나가는 문제와도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의 평화

와 관련 충분히 연구되고 논의되어야 할 이슈 중에 하나이다.

그래서 귀감으로 삼을 만한 역사적 경험으로 고려 전기의 북진정책과 조선 전기의 북진 논의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본다.

#### 고려 전기 ‘北進政策’과 한중관계

#### 【갈등】

애초에 고려의 영토는 청천강에서 원산만 까지였고 10세기말 거란족의 침입을 물리치면서 압록강까지, 14세기 元이 멸망한 뒤에는 두만강까지 진출함으로써 현재 한국 영토의 기초적인 범위가 형성되었다. 이 과정을 설명해주는 고려의 북방경영과 영토정책은 ‘北進政策論’으로 이해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후삼국 정립 시기에 고려가 고구려의 후신임을 표방하였으며 국호인 高麗와 高句麗의 유사성, 993년 거란족의 1차 침입 때에 거란과 담판하면서 고려는 고구려를 계승했다는 徐熙의 주장, 공민왕이 요동을 정벌할 때 遼陽과 瀋陽 일대를 고려의 영토라고 주장한 것 등에서 근거를 찾는다. 고려가 고구려의 후신임을 자처했음을 근거로 고려의 북방영토정책을 ‘상실한 故土를 수복하기 위한 북진정책’을 고수한 것으로 평가한 것이다.

그러나 이상의 견해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다. 비판의 요지는 몇 가지 사안만을 가지고 성급하게 고려의 영토정책 전반을 평가했다는 것이다. ‘北進政策論’에 대해서는 고려 내부의 언급과 함께 대외관계의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인데, 특히 고려의 북진정책은 필연적으로 상대방인 중국과 대립하게 되었을 것이다. 또한 고려시대의 북진정책은 고려가 북진을 실행했다거나 직접적인 북진정책이 어떠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설명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몇 가지 상징적인 언급이 북진정책이 있었음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심하게 말하자면, 민족주의적 정서가 작용하면서 그냥 연구자들에 의해 ‘고려가 북진정책을 추진했던 것’으로 믿어졌다는 것이다.

고려시대의 북벌문제와 관련해서는 妙淸의 故土 회복 주장을 빼놓을

수 없다. 西京(평양) 출신의 승려 묘청은 자신이 주장해 온 西京遷都運動이 좌절되자 1135년 반란을 일으켜 ‘大爲國’의 건립을 선포하였다. 묘청의 반란은 1년여에 걸쳐 진압되었다. 묘청의 반란에 대한 평가는 특히 민족자주정신을 고취하려던 신채호에 의해 크게 부각되었는데 특히 묘청이 주장한 ‘稱帝建元論’, ‘金國征伐論’은 자주정신에 입각한 민족적 기상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묘청을 진압한 현실 정치의 주류는 金富弼에게서 보이는 ‘事大交隣’의 세계관이었고, 이는 ‘事大主義’로 비난받기도 했다. 하지만 왜 ‘事大交隣’의 원칙이 당시 고려사회의 주류였는지에 대해서는 냉철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는 崔瑩이 주도한 고려말 요동정벌 추진과 李成桂의 威化島回軍도 고려할 만하다. 明이 元代에 雙城總管府가 설치되었던 鐵嶺 이북에 위치한 東北面の 할양과 그곳 거주민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자 고려와 명나라 사이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었고 이것을 ‘鐵嶺衛 문제’라고 한다. 明의 鐵嶺衛 설치 통보가 있자 고려는 군사행동을 일으키기로 결정하고 요동정벌군을 진격시켰다. 이것은 분명한 영토분쟁이었다. 고려가 중국의 신흥 통일왕조를 선제공격하는 전례 없는 사건이었으나 이성계 주도의 무장들이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요동정벌을 주장한 禡王과 崔瑩을 축출함으로써 고려내부의 권력투쟁으로 전개되어 종결되었다.

#### 조선 전기의 북방경영과 대외관계 : 북벌논의를 포함하여 【갈등】

조선 전기 북방경영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는 世宗代 4郡 6鎭의 개척이었다. 여진족이 조선북부를 자주 침략하자 최윤덕, 김종서를 보내 여진족을 정벌하였고 평안도 압록강변에 4군을(1443년 세종25년), 함경도 두만강 주변에 6진을(1449년 세종31년) 설치하였다. 이로써 압록강과 두만강을 경계로 국경선을 갖게 되어 현재의 국경형태가 자리잡게 되었다.

조선시대의 북벌논의는 孝宗이 대표적이다. 인조의 둘째아들로 태어나 형인 소현세자와 함께 청나라에서 오랜 볼모 생활을 했던 효종은 즉위 후 조정의 排淸 분위기를 주도하며 북벌계획을 강력히 추진하였다. 우선 親淸派 인물 金自點 등을 제거하고 宋時烈, 宋浚吉 등을 등용하여 북벌의 이념적 지주로 삼았다. 訓練都監을 강화하고 御營軍과 禁軍을 정비하였으며 기마병의 확보에 주력하였다. 군비강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반에게도 軍布를 거두게 하였다. 그러나 두 차례의 호란이 남긴 후유증이 조선사회에 가시지 않은 상태였고 빈번한 자연재해는 재정궁핍을 야기하여 군비강화에 걸림돌이 되었다. 또 삼남일대에서 도적의 발생이 빈번하여 조정내부에서도 북벌에 대한 회의가 강력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였고, 청나라는 국세가 이미 확고해져서 효종에게 북벌의 기회는 좀처럼 포착되지 않았다. 결국 1659년 효종이 죽자 北伐論은 무산되기에 이른다.

조선시대 지식인의 중국에 대한 인식

【중립】

한국고대사 관련 개설서에 흔히 “신라왕이 上開府樂浪郡公新羅王에 책봉되어 조공을 바치고…”라는 서술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금의 민족적 정서에 비추어보면 사실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조선은 가장 모범적인 朝貢國으로 평가되고 있고, 말할 것도 없이 그 조공의 대상은 明清代의 중국왕조이다. 그렇다면 조선의 사대부들은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중국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기에 中華主義의 동북아 질서를 자기 신념으로 받아들였을까. 이 문제는 전통적 동북아 질서를 한국사의 관점에서 조망하는 것이고, 나라의 규모 차이가 더욱 벌어진 오늘날 한중관계의 미래를 모색하는 데에 참고가 될 것으로 본다. 향후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깊이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 두 가지 상반된 느낌을 주는 사안을 예시해 본다.

## 조선 전기 ‘宗系辨誣’ 문제와 중국인식

【중립】

‘宗系辨誣’는 조선 개국 초부터 선조 때까지 약 200년간 명나라에 잘못 기록된 조선 태조 李成桂의 宗系를 고쳐 줄 것을 요청한 사건이다. 태조가 명나라의 『太祖實錄』, 『大明會典』 등에 고려의 權臣 李仁任의 아들로 되어 있는 것을 처음 안 것은 1394년(태조 3년)이었다. 李仁任은 고려말 禡王 때 이성계의 정적이었는데, 이성계를 그의 아들이라 한 것은 조선으로서는 용납할 수 없는 모욕이었다. 이 사건은 두 나라 사이에 심각한 외교문제로 부각되어 태조 때부터 여러 차례 사신을 보내 고쳐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明朝는 200여년이나 차일피일 미루면서 對朝鮮 관계의 지렛대로 활용하였다. 그리하여 역대 왕들의 가장 큰 현안이 되었다. 그러다가 1584년(선조 17) ‘宗系辨誣奏請使’ 黃廷彧이 가서 정정키로 확정을 보고, 1588년 兪泓이 고쳐진 『대명회전』을 가지고 돌아와 일단락되었다. 선조는 兪泓이 중국에서 돌아올 때 친히 慕華館에까지 나아가 명나라의 勅使를 맞았으며, 공을 세운 兪泓에게는 벼슬을 올리고 노비와 토지를 내렸다. 또한, 선조는 종묘에 가서 宗系의 개정을 고하는 제사를 지내고 大赦令을 내렸으며 백관에게도 벼슬을 올려주었다고 한다.

## 조선 사대부의 ‘小中華’ 의식

【중립】

전통시대의 한국인들은 스스로 箕子의 후손이라고 생각하였다. 이에 대해 혹자는 중국이 주변민족에게 문화적 혜택을 미친 전형적 사례로 자랑하고 혹자는 한국인의 부끄러운 사대주의적 사고의 한 표현으로 규탄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는 모두 근대민족국가가 출현한 이후에 발생한, 문화를 국가와 민족 단위로 분류하려는 의식의 소산일 뿐이다. 전통시대의 한국인들이 箕子의 후손임을 자처한 까닭은 ‘箕子’가 상징하는 고대 동북아 지역의 가장 고급한 문화를 자기들이 향유하고 있음

을, 즉 ‘東方禮儀之國’임을 자랑하기 위해서였다. 당시의 한국인들은 중국문화와 한국문화를 구별하려 하지 않았다. 그 기원이 어디에 있든 고급하고 가치 있는 문화라면 수용하고 소화하여 향유하고자 열성적으로 노력하였을 뿐이다. 그들은 문화를 국가나 종족보다 더 높은 상위개념으로 설정하였다.

명나라가 滿州의 淸[滿淸]에 의해 멸망된 뒤, 조선인들은 한국이 곧 ‘中國’이라고 생각하였다. 문화적으로 열등한 ‘夷狄’인 女眞에 의해 세워진 滿淸이 중국을 점유하고 지배하게 됨으로써, 중국은 ‘야만의 영역’으로 타락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세계의 중심’으로서의 ‘중국’이 아니며 동북아에서 ‘문화 영역’으로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조선이 진정한 ‘중국’이라는 것이다. 흔히 ‘小中華’ 사상으로 불리는 이런 조선인의 독특한 세계관은 세계 최고의 문호가 생산되고 보존되는 곳이 곧 ‘중국’이라는 특이한 ‘중국’ 개념에 바탕을 둔 것이다.

물론 이러한 한국인의 ‘중국’ 개념은 당시 중국인의 일반적 ‘중국’ 개념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한국인의 ‘중국’이 문화공동체를 가리키는 일반 개념이었음에 반해, 중국인의 ‘중국’은 특정한 역사공동체를 지칭하는 특수 개념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선시대에 일반화한 이 특이한 ‘중국’ 개념과 그것에 기초한 독특한 세계관은 전통시대의 한국인들이 문화의 가치가 국가와 종족의 구분을 초월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추구하여 향유하고자 한 문화가 중국이라는 특정한 역사공동체의 문화이기보다는 동북아에서 가장 고급하고 가장 가치 있는 문화였음을 시사하기도 한다. 요컨대 한국인들이 얻고자 노력한 문화는 ‘중국문화’가 아니라 ‘중국문화’와 ‘한국문화’ 등이 융합하여 낳은 최고의 ‘동북아 문화’였다.

조선 후기 ‘白頭山定界碑’와 국경문제

【갈등】

조선후기 국경문제를 둘러싼 한중의 관계는 숙종38년(1712)에 세워

진 白頭山定界碑에 함축되어 있다. 이전까지 양국간에 쟁점이 되었던 ‘犯越(경계침범)’을 해결하기 위해서 淸나라 측의 요청에 의해 조선과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자 함이었는데, “서쪽은 鴨綠, 동쪽은 土門”으로 경계가 정해졌다. 定界 후에도 ‘犯越’ 문제는 지속되어 양국간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으나, 이로써 18세기 후반 조선은 국경 방어를 강화하고 경제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고, 이러한 상황은 근대 이후 간도문제가 발생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청조가 조선과의 경계를 확실히 하고 싶어 한 이유는 첫째, 만주족 祖宗의 발상지로 백두산을 신성시하고 있었기 때문이고, 둘째, 인삼과 모피의 산지였던 백두산의 경제력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 특히 후자의 문제는 조선과 갈등을 빚는 주된 원인이었다. 백두산 일대에 거주하는 양국 주민들에게 이것은 생존의 문제였으므로 정부가 越境을 금한다고 해도 ‘犯越’ 문제가 해결될 일은 아니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누차 백두산 일대를 조사하여 경제가치가 있는 곳을 확보하려 하였고, 조선은 중국의 조사를 군사적 행위로 받아들여 강력히 대응하였다.

1712년 청이 국경조사단을 파견하자 조선도 조선에 지나치게 불리하지 않은 합의를 얻기 위해 공동조사단을 파견하였으나, 결국 청조의 강압적 요구에 따라 국경문제가 일단락 지어졌다. 이 사건은 18세기 이후 소극적 자세로 수백 리의 강토를 잃었다고 비판되었고 현재의 연구자들에 의해서도 대부분 비판을 받고 있다. 백두산정계비 건립의 성격도 연구자에 따라 단순한 기념비로 보느냐, 아니면 국제조약 체결로 보느냐가 나뉘어지고 있는데 당시 조선이 처했던 현실, 이후 청과 설정된 새로운 관계 등과 함께 고찰되어야 할 문제이다. 또한 언젠가 국경문제가 부각될 것에 대비하여 슬기로운 대처를 위한 역사적 자산과 교훈을 축적해 둘 필요가 있다.



## 甲申政變과 19세기 한중관계의 질적 변화

## 【갈등】

19세기 열강이 속속 진출하는 가운데 종래 전통적 책봉조공관계를 유지해 오던 한중관계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특히 조선과 수호를 맺고 조선으로 진출하려던 제국주의 열강들은 조선이 청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 독립국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 했기 때문에 양국간 ‘종속논쟁’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1876년 일본의 무력에 의해 조선이 개항된 전후를 기점으로 조선의 종속문제에 대한 청의 태도는 열강의 분쟁문제에 휘말리지 않으려는 방관적 정책에서 조선에서의 기득권을 인정받으려는 적극적 개입정책으로 바뀌어간다. 수세에 몰려있던 조선은 열강에게 종속문제에 대한 어떠한 입장 표명도 하지 못하는 처지였다. 1884년 갑신정변이 淸兵의 신속한 개입으로 좌절된 것은 朝淸關係의 본질적 변화를 야기했다. 전통적 책봉조공관계는 위낙에는 외교와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었으니, 갑신정변을 계기로 비로소 중국은 조선의 외교와 내정에 간섭하며 조선의 자주권을 무시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淸이 조선에서의 실리를 독점하기 위해 전통적 한중관계를 훼손하자 조선에서도 전통적 한중관계에 대한 회의가 일어났다.

이처럼 19세기에 이르러 변질된 한중관계는 종종 전통시대 전반에 걸친 한중관계에 관한 오해로 이어지기도 한다. 즉, 중화사상과 조공책봉제도의 틀 안에서 자주적으로 이루어졌던 국제질서가 ‘사대주의적, 종속적 관계를 지속해 온 것’으로 오해되면서 전통시대 조선의 외교를 통째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다.

19세기 중반 서구열강의 침입으로 동북아에 위기상황이 초래되고 새로운 근대적 국제질서의 원리와 조우하게 되면서, 한중관계는 질적으로 변화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근대 이후 전에 없이 갈등을 빚게 되는 동북아 3국의 관계를 이해하고 갈등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통해 새로운 평화의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계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해둘 필요가 있는 이슈이다.

朝貢使行에 부수되는 형태로 이어져오던 전통적 무역방식은 서구열강의 침략으로 양국이 세계경제체제 속에 편입되면서 변화하게 되었다. 우선 양국간의 통상관계의 수립 문제가 1880년(고종 17) 조선내부에서 외국과의 통상문제가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함께 대두되었다. 당시 조선 대신들은 개화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도 유교적 가치관을 쉽게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서양과 통상조약을 맺고 서양의 문물수입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일본의 조선진출을 경계하던 청이 조선과 서양세력과의 통상을 적극 권고하면서 조선의 정세는 개화 쪽으로 빠르게 흘러갔다.

이듬해(1881) 조선은 조공사행을 폐지하고 북경에 조선사신을 상주시키며 새로운 통상관계를 맺자고 청조에 요청하였고, 수년간의 협의를 거쳐 부분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치면서 조선에 대한 청의 대외정책이 자주권을 침해하는 간섭정책으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양자간에 평등한 통상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조선을 종속국으로 보기 시작한 청은 군사외교권 뿐 아니라 재정권에도 간섭하여 종속국과 평등한 통상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변질된 한중관계의 통상문제를 대변해주는 것이 1882년 체결된 「韓中商民水陸貿易章程」이다.

전통적 한중관계에 따르면 양국간 무역은 조공에 부수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국가간 공식적 무역은 조선의 공물에 대한 중국의 回賜 형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졌고, 부수적으로 민간차원의 상업거래도 활발하였다. 이것은 조공사행을 따라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횡수와 수량에 있어 제한적이긴 했어도 기본적으로 양자간 동등한 상업거래였다. 19세기 동북아가 강제로 개항됨에 이르러 전통적 한중관계가 변질되자 그에 따라 무역관계도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이런 근대 이후 한중관계의 변화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와 명확한 인식이 필요하다.

## 萬寶山 事件과 한중의 상호인식

## 【갈등】

20세기초 間島지역으로 이주한 조선인들과 중국인 사이에 시시때때로 갈등이 있었는데, 이 와중에 1931년 7월 중국 長春 근교의 萬寶山 三姓堡에서 조선인 농민과 중국인 농민 사이에 수로 개설 문제를 둘러싸고 일어난 분규가 바로 ‘萬寶山 事件’이다. 1920년대 후반부터 중국 관헌에 의한 만주 거주 한국인에 대한 박해와 한국에 와 있는 중국인 노동자로 인해 조선인 노동자의 求職難이 심화되었다는 상호 피해의식이 팽배해 있어 한중간에는 항상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사건의 여파는 국내에서 더욱 심각하게 일어났다. 1931년 7월 2일과 3일에 발행된 조선일보의 호외에는 당시 만주 길림성 長春 부근 萬寶山에서 조선인과 중국인 농민이 대거 충돌해 많은 한국인 인명피해가 나고 간도 주둔 일본군이 진압을 하기 위해 출동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보도되었다. 이에 전국에 산재한 중국인 가옥과 상점에 대한 보복 성격의 습격이 자행되었다. 하지만 조선일보의 보도는 오보였다. 당시 만주침략을 준비 중이던 일제가 조선인과 중국인 사이가 안정되면 자신들의 만주공략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해 사건을 조작해 외부로 흘린 것이고, 이것을 아무 조사 없이 그대로 보도한 탓에 쓸데없는 대형사건이 일어나고 말았던 것이다. 특히 중국인에 대한 폭행이 반일감정이 유달리 강했던 평양에서 더욱 심했었는데, 이 과정에서 일제가 조선인들을 선동해 중국인에 대한 폭행을 부추겼다는 의혹이 계속 제기되기도 했다.

평양에서 萬寶山 事件으로 수많은 중국인 화교가 폭행당했다는 사실이 중국에 전해지면서 중국인의 한국인에 대한 여론과 인식이 극도로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중국인들은 대개 제국주의의 침략을 받고 있다는 동병상련의 심정으로 한국을 동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이 일을 계기로 ‘쫓대 없이 일제에 속아 이리저리 난동을 부리는 불쌍한 사람들’로 매도되기도 했다.

아무튼, 萬寶山 事件은 근대 이후 동북아 3국의 심각한 갈등구조를 반영한 필연적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갈등구조는 기본적으로 오늘날에까지 지속되어 자기중심적으로 상대를 비하하는 심성을 남기고 있다. 동북아의 화해와 공동번영을 위해, 萬寶山事件의 여파와 이 사건에 반영된 갈등구조를 명확히 이해하고 이를 반성하는 역사인식이 요구된다.

한국 화교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중립】

한국의 화교 사회가 정식으로 형성된 것은 19세기부터이다. 기록에 의하면 1882년 임오군란이 발발했을 때 파견된 淸兵과 함께 인천으로 이주해 온 중국상인이 한국화교의 시초였다. 당시에는 한중간 「商民水陸貿易章程」의 체결로 불평등한 무역관계가 성립되어 있었으므로 한국에서 화교들의 위상 및 세력은 자못 강대하였다.

이후, 1898년 義和團의 北淸事變으로 山東省 일대가 전란에 휘말리자 이 일대 중국인들이 피난 차 가까운 한국으로 대거 건너오기 시작하였는데, 이들도 주로 인천을 자신들의 집결지로 삼았기 때문에 인천은 화교들의 근거지가 되었으며 서울과 함께 화교들의 양대 세력권이 되었다. 일제시대를 통틀어 화교의 경제력은 막강하였고 해방 후 정치적 혼란으로 한국의 경제가 제대로 정비되지 못하였을 때에도 華商은 일제시기에 형성되어 있던 貿易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크게 번성하였다. 화교사회의 경제호황은 1948년 한국정부가 수립되면서 막을 내렸는데 이후 화교사회는 한국정부의 각종 제도적 제한과 차별 대우 아래 위축되어 왔다.

1949년 중국공산당에 의해 사회주의 중국이 건립되자 한국화교는 고국과의 연계도 끊겨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정착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럼에도 자유당정부 시절의 <倉庫封鎖令>, 자유당정권과 박정희 정권 아래 시행된 통화개혁, 외국인 토지소유금지법, 화교들의 대표적

직업인 중국음식점에 대한 불리한 세율적용 및 음식값 통제, 1년마다 비자갱신 의무화 등 한국의 각종 차별정책은 화교를 날로 위축시켰고 따라서 많은 화교들이 대만이나 동남아, 미국으로 다시 이주해 가는 상황을 불러왔다.

이처럼 한국사회가 화교들에게 취한 차별정책은 한국사회가 얼마나 배타적인가를 잘 보여준다. 1993년 외국인 토지소유금지가 폐지되었고, 화교가 소유한 비자 및 각종 서류에 대한 제한도 서서히 풀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사회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화교들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동화수용정책이 필요한 시기이다. 이는 국제적으로 그 위상이 날로 높아 가는 이른바 '화교 경제권'이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요긴한 일이다. 더불어 한국화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역사연구도 병행될 필요가 있겠다.

#### 韓民族의 만주 이주 및 정착 과정과 초기 韓人社會 【중립】

고대로부터 19세기중엽까지 한민족이 만주로 이주해 들어간 것에는 몇 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고대 만주지역에 韓民族이 세운 부여, 고구려, 발해 등이 흥망성쇠를 거듭했던 시기로서 이들 고대국가들이 멸망한 이후에는 만주에 韓民族 국가가 세워진 일이 없으므로 이후 韓民族의 만주 이주는 산발적인 형태로 이루어졌다. 둘째 元代로부터 明初에 이르는 시기인데 이때에는 단순한 이민이라기보다는 전쟁포로나 중국측의 병력과견요구 등에 따라 이주하였다. 셋째 明末에서 19세기 중기까지의 시기는 경제적 이유에서 집단이주가 많이 발생하였다. 특히 조선북부지방의 흉년은 북부거주자의 密越을 부추겼으며 국경지역 주민의 수렵 목적에 따른 이주도 빈번하였다. 마지막으로 19세기 후반은 韓民族의 이주 및 본격적 현지정착이 이루어졌고 초기 한인사회가 형성되었던 시기이다. 지속되는 불법적인 국경 넘기는 정부도 근절할 수 없는 문제였고 일제시기 토지조사 등의 명목으로 일제가 한국인

의 농토를 잠식하고 강제수탈하자 땅을 잃은 농민과 생업을 상실한 유랑민은 더욱 그 수요가 늘어나서 전국에서 滿洲로 흘러 들어갔다. 1900년대에 들어서면 만주인구의 70%를 韓民族이 차지하게 되었다. 한민족이 만주지역으로의 이주를 선호한 가장 중요한 원인은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높았기 때문이며, 현재 연변지역을 중심으로 농토개간, 수전 개발과 일반 농업경영을 통해 한인사회가 정착되기에 이르렀다.

만주로 이주·정착한 한민족은 현재 중국 동북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의 뿌리이며 이들에 대한 역사연구는 현재 변경지역사의 귀속문제와 더불어 민족사 영역에서 몇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 우선 동북지역의 역사와 한민족의 관계를 부정하거나 최소화하려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국적 및 국경에 따라 고대로부터 19세기에 이르는 만주지역의 역사를 韓民族과는 무관한 것으로 정리해나가고 있다. 한편 조선족사회나 한국에서는 동일한 민족적 뿌리를 가진 민족사 측면에서 만주문제를 접근하고 있긴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조선족과 한국 사이의 공통된 민족감정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필요에 따라 일관성 없는 잣대가 적용되고 민족적 구성분포만을 따져 自國史로 만주지역을 편입하려는 의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한 한 가지 대안으로는 만주지역을 自國史에 가두어두려 하지 말고 하나의 地域史로 접근하여 만주가 지닌 경제·문화적 특징, 외부로부터의 압박과 갈등, 내부사회의 발전과정 등을 재정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자칫 한중 양국의 대립과 갈등을 야기할지도 모를 영토문제 자체에 집착하기 보다는 공존을 모색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과 방법론이 개발될 것이다.

근대 이후 한중간의 국경조약과 국경문제

**【갈등】**

1712년 설치된 백두산 정계비에는 ‘서쪽으로는 鴨綠, 동쪽으로는 土門’이라고 경계가 쓰여져 있는데, 양국은 ‘土門이 어디냐’를 두고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 淸나라는 豆滿, 圖們, 土門을 동일한 강으로, 조선은

土門江은 두만강과 별개의 강이며 松花江의 지류라고 각각 주장했다. 양국은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1885년 乙酉勘界會談과 1887년 丁亥勘界會談을 가졌으나 아무런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후 1905년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으로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찬탈한 일본은 1909년 청나라와의 협상을 통해 만주철도 부설권 등 각종 이권을 얻는 조건으로 間島를 청의 영토로 인정하는 ‘간도협약’을 체결했다.

쟁점이 되고 있는 한중간 국경문제의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핵심논쟁거리인 백두산정계비, 乙酉·丁亥勘界會談, 간도협약 등에 관련된 개별 사실은 비교적 상세히 밝혀졌지만 그 전후맥락을 역사적으로 일관되게 체계화할 수 있는 논리가 여전히 미흡하다. 따라서 거시적 차원에서 근대 한중국경문제를 조감할 수 있는 관점 정립이 필요하다. 둘째, 단순히 지리적인 국경선을 劃定하는 문제에만 편중되었던 기존 연구를 극복하고 北方地域開發史, 文化領土史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를 활발히 진행시켜야 한다. 셋째, 국제법의 입장에서 좀더 폭넓은 국경조약의 세밀한 분석과 국경분쟁사례에 대한 치밀한 조사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넷째, 기존에 알려진 자료를 재해석하는 경향에서 벗어나 국경문제와 관련된 자료를 폭넓게 다시 수집해야 한다.

한중간 국경문제는 언젠가는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한중간의 과제 중에 하나이다. 자칫 한중간에 심각한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다. 한중간의 진정한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맥락을 비롯한 다양한 관점의 연구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IV. 韓日의 이슈

고대 한반도인의 일본 이주의 역사

**【협력】**

집단 이주의 역사는 고대 동북아 문화교류의 주요한 통로였다. 더욱이 한반도를 통해 대륙의 선진문화가 일본열도에 전해지는 과정에서는 한반도에서 건너 간 이주민들의 역할이 특히 중요하였다. 문화교류를 통한 각국의 문화발전은 가장 바람직한 협력사례의 역사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일 양국은 이 문제를 두고도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일본은 한국의 영향을 가능한 축소해 평가하려고 하고 한국은 이를 최대한 부각시키려는 것이다. 한일이 진정한 동북아의 평화를 이루려면 자국 중심의 역사인식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역사사실에 대한 포괄적이고도 균형 잡힌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아래에서는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한반도에서 건너 간 이주민과 일본고대문화의 관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본다.

한반도 이주민과 일본열도의 야요이(彌生)문화

**【협력】**

야요이 문화란 야요이 방식의 토기가 출현하는 초기 금속기시대 일본문화를 말하는 것으로, 기원전 4세기경에 시작되었다. 야요이 문화의 특징은 벼농사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한반도로부터 도래한 집단에 의해 개시되었다고 여겨지고 있다. 기원전 4세기경 한반도에서 온 도래인 집단이 가라쓰(唐津)와 후쿠오카(福岡) 평야에 정착하여 저지대 습지를 논으로 바꿈으로써 일본의 벼농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로부터 건너 온 이주민에 의한 벼농사가 각 지역으로 퍼져나가 벼농사를 특징으로 하는 야요이 문화를 이루어 내고, 이 문화를 시작으로 쌀을 주식으로 하는 오늘날의 일본문화가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기원전 4세기경 현해탄에 접한 기타큐슈(北九州) 지방에서 벼농사가 시작되어 약 200년 사이에 일본의 도호쿠(東北) 지방까지 퍼져 농경사회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이는 야요이 문화의 주요 특징이 되었다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벼농사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기술이 아니라 농사일을 몸에 익힌 사람들이 도래함으로써 뿌리내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벼농사 기술을 체득한 한반도 이주민에 의해 일본열도의 야요이 문화가 형성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는 한반도 이주민에 의한 문화전파의 주요 사례로서 ‘협력’의 역사경험이라고 할 수 있다.

#### 한반도 이주민과 아스카(飛鳥)문화

#### 【협력】

일본의 가쓰라가와(桂川), 요도가와(淀川), 야마토가와(大和川)의 하류 일대에서 대대적인 논 개발이 이루어진 것은 5세기 중반부터이다. 이러한 개발은 한반도 이주민들의 집단적 노동에 의한 것이었다. 신라 계열의 하타 씨(秦氏)는 기나이(畿内) 지방의 야마시로(山城), 셋쓰(攝津), 하리마(播磨) 등지를 개척하는 데 활약하였고 백제 계열의 아야씨(漢氏)는 가와치(河内)와 야마토 지방에서 새로운 논을 개척했다. 5세기말에 들어가면 백제로부터 구즈이(葛井), 후나(船), 쓰(津)의 세 성씨가 도래하는데 후나 씨는 재정과 문필 분야에서 활약했다고 한다.

이들 충적평야를 개척하려면 수로를 만들고 저수지와 용수로로 만드는 등의 새로운 토목, 관개, 농기구의 제조기술이 요구되는데, 이는 개척기술을 몸에 익힌 사람들의 집단적 노동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례는 이전의 야요이 시대에 한반도 이주민에 의해 전파된 벼농사 문화가 또 다시 5세기에 와서 한반도 이주민에 의해 발전·개발되어 일본의 아스카 문화를 발전시키는 ‘협력’의 사례로서 볼 수 있다.

4세기 후반부터 시작되는 고구려의 남하는 동북아 지역을 커다란 전란의 소용돌이 속에 집어넣었다. 한반도 남부의 백제, 신라, 가야 등은 직접 고구려의 공격을 받게 되었고, 철기 지원을 가야에 의존해야 했던 倭國 또한 고구려와의 싸움에 휘말리게 되었다. 강력한 고구려 기마병과의 접촉은 騎馬戰法이나 승마의 풍습을 일본인들이 배울 계기가 되었으며, 이로 인해 5세기 이후 일본고분에 馬具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또 전란이 계속되면서 일본으로 건너오는 이주민이 늘어나고 이들에 의해 새로운 문화가 파도처럼 밀려들어 倭人들의 생활 자체가 큰 변화를 겪게 되었다. 확실히 5세기는 일본 고대에 있어서 문명개화의 시대이며 倭國이 문명사회로 들어가는 입구에 도달한 때이며, 이 문명개화의 주역이야말로 바로 이주민[일본에서는 渡來人이라고 함]이었다. 이주민 중에서 수에키(須惠器)라는 토기문화를 일으켜 준 이들이 바로 伽倻人이고, 불교미술문화를 일으켜 준 이는 百濟人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한반도 이주민들의 영향은 현재 일본의 지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먼저 도쿄의 신주쿠역에서 전철로 1시간 가량을 달리면 세이부선(西武線)의 고마역(高麗驛)에 이르게 되는데, 이곳이 바로 고마향(高麗鄉)이라는 곳이다. 고구려와 관련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고마역 앞에는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라 새긴 한 쌍의 장승이 서 있어 한국 문화가 고마향에 깊게 뿌리내려 있음을 직감하게 한다. 또한 오사카의 이카이노 지역 일대는 옛날에 다라군(百濟郡)이나 구다라천(百濟川)으로 불린 적이 있으며, 최근에는 이 지역에서 백제와 관련된 문물이 확인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또한 효고현(兵庫縣)의 아마가사키(尼崎)市 근교에는 시라이(白井) 신사가 있는데, 이 '시라이'는 신라를 지칭하는 것임에 틀림없다.

이처럼 삼국의 국명이 오늘날까지도 일본열도의 여러 지명에 남아있

다는 것은 고대 한반도의 문화가 일본에 끼친 영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데, 이에 대한 조사 및 연구의 확대가 필요하다. 특히 한반도로부터 온 이주민들은 선진문화를 습득하고 그것을 일본열도에 전파시켜 고대 일본문화를 풍성하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따라서 그들의 흔적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이는 고대 한일간의 문화교류의 史的 흔적이며, 한일간 ‘협력’의 역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任那 문제를 둘러싼 4~6세기 한일관계

【갈등】

나라 분지에서 성립한 야마토(大和)정권이 4세기 후반 규슈 북부로 진출하였고 다시 대군을 한반도에 보내 가야 지방을 점령한 후 2세기에 걸쳐 이 지방을 지배하였다는 ‘고대일본의 韓半島南部 經營論’이 이른바 ‘任那日本府’說이다. 그런데 4세기의 일본열도에 관한 기록이 『日本書紀』와 『古事記』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야마토정권의 출병을 입증하는 결정적인 자료로 이용되었던 것은 414년에 건립된 고구려 광개토태왕비문과 ‘七支刀銘文’이다. 그러나 이 비문에 대한 조각사건이 있었고 비문과 명문의 해석에 오류가 있다는 점에서 신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는 일본학자들은 야마토정권이 鐵釘과 선진기술자를 얻기 위해 출병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철제 무기로 무장한 新羅軍과 伽倻軍을 알몸이나 다름없는 야마토 군대가 어떻게 격파하여 지배할 수 있었는가’의 문제와 ‘제철 기술자를 데려오면 되는데 왜 소모품인 鐵釘을 대량 반출하고 제철 기술자를 뺀 선진기술자를 데려왔는가’라는 의문이 남는다. 이는 임나일본부설의 모순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모순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일본학자들이 지금까지 주장하고 있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일관계사를 그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고대 한일관계는 선진문화의 전파와 수용이라는

‘협력’의 관계로 보이는 사례들이 대부분이다. 그럼에도 근대 이후 한일 간 갈등구조가 역사인식에도 투영되어, 사료로 명확히 증명할 수 없다는 맹점을 틈타 역사에서의 우위를 차지하려는 의도를 바탕에 깔고 있다. 말하자면 실제 역사전개로 보아서는 ‘협력’의 역사경험임에도 오늘날의 역사인식에서는 ‘갈등’의 요소로 자리매김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자국 중심의 역사인식은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 동북아가 근대의 갈등구조를 극복하고 진정한 화해와 평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중국적으로 역사인식에 투영된 갈등구조를 넘어서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서라도 포괄적인 역사연구가 지속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삼국과 일본 : 백제를 중심으로

【협력】

6세기말부터 7세기초에 걸쳐 다수의 백제 학자와 승려가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의 아스카 문화의 개화에 큰 역할을 하였다. 백제는 513년에 段楊爾를 일본에 파견하는 것을 시작으로 高安茂, 司馬達 등과 같은 五經博士를 일본에 파견하였으며, 554년에는 易 박사인 王道良, 曆 박사인 王保身이 일본으로 갔다. 이러한 파견은 일본의 요청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587년에는 승려와 사원 건축 기술자의 파견 요청이 있어 이듬해 588년 승려 令照, 慧聰이 기술자 일행과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기도 했다. 이들의 활약으로 인해 일본은 관료의 수급을 위한 지식층 형성과 화려한 아스카 문화를 이룩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百濟人이 渡日하여 아스카 문화 형성에 기여한 사례는 허다하다. 이와 같은 渡日한 百濟人들의 역할은 선진문화의 전파라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예를 들어, 당시 일본은 아직 일정한 曆의 제정과 사용이 없었는데, 백제의 曆 博士의 파견은 曆法採用에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례들은 백제의 선진문화 전파, 한반도를 통한 중국의 선진문화 수용이라는 면에서 ‘협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밖에, 고구려 및 신라와 일본의 관계는 백제에 비해서는 소원하였

졌지만 일정한 관계를 지속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한 듯 백제와 일본의 관계에 연구가 집중되어 고구려 및 신라와 일본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부진한 형편이다.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미술과 음악으로 본 고대한일관계

#### 【협력】

고대한일관계는 대개 정치적 측면에 상대적으로 관심이 집중되어 자꾸 갈등의 측면이 부각되는 경향이 있다. 이런 점에서 문화, 예술의 측면이 좀 더 부각될 필요가 있겠다. 오늘날 동북아 3국이 비교적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분야가 문화, 예술 방면이라는 점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이와 관련된 몇 가지 사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미술에 있어서의 고대한일관계를 기와로 예를 들어보자. 신라의 기와는 6세기 전반부터 고구려 및 백제의 瓦當形의 영향을 받아 양식에서 서로 다른 두 계통의 복합과정을 거친 후 6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독자적인 瓦當形이 성립되었다. 그리고 통일신라의 초기인 7세기 후반기에 이르러 唐草文이 장식된 卍瓦當이 제작되기 시작하면서 三國期에 유행했던 단순·소박한 圓瓦當의 意匠도 다양하게 변화되어 한국의 瓦塼史에 있어 최고의 개화기를 맞게 된다. 한편 일본에 기와가 전래된 시기는 『日本書紀』의 기록에 따라 588년에 4명의 瓦博士가 백제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6세기 후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일본에 기와가 전래된 아스카 시대의 瓦當形은 백제의 直傳樣式이 기본이 되었다. 이와 같이 백제 계열의 瓦當形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7세기 중반부터는 고구려 및 古新羅瓦當形의 영향을 받기 시작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를 보인다. 7세기 후반부터는 통일신라의 瓦當形의 영향이 보다 직접적이고 광범위하여 신라와의 문화적 관련성이 점차 증가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음악의 경우는 554년부터 887년까지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 음

악이 일본으로 일방적 유입되었으며, 삼국 음악이 일본의 雅樂寮에서 200여년에 걸쳐 고정되어 있었다.

미술과 음악 역시 다른 선진문화의 전파와 마찬가지로 고대 한국과 일본의 '협력'의 체제 속에서 전파되고 수용되는 사례를 보여준다.

백제멸망, 그리고 신라와 일본의 갈등 【갈등】  
일본의 百濟 救援軍 파견과 白江 전투에서의 패퇴(663년) 【갈등】

660년 백제가 멸망한 후 遺民에 의해 백제부흥의 구국적 봉기가 일어난다. 그들은 일본에 援軍을 요청하였고 일본은 백제구원을 위해 百濟 救援軍을 출병시킨다. 白江戰鬪는 663년에 扶餘豊이 이끄는 百濟 復興軍에 합류한 2만 7천명의 倭軍이 白江에서 나당연합군과 벌인 전투이다. 그러나 이들은 白江戰鬪에서 大敗하고 말았다.

일본의 倭王이 백제에 구원병을 보낸 이유는 무엇일까. 외부상황을 내부위기 타개의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나 백제로부터의 인적·물적 자원의 지속적인 공급이 왕권유지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던 상황도 크게 작용하였다. 백제 성립 이후 멸망에 이르기까지, 百濟와 倭國은 지배층 사이에 깊은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동맹관계가 아니라 장기간의 역사적 흐름 속에서 형성된 친척과 같은 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러한 바탕 아래 일본의 내부적 요인과 백제의 지원군 요청이 맞물렸던 것이다. 이는 작게는 백제와 倭國, 크게는 고대 한일관계의 밀접함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신라의 삼국통일과 일본 【갈등】

고구려 왕조를 무너뜨린 신라는 일본에 사절을 보내 백제왕조의 부흥운동에 가담하지 말 것을 충고하였다. 이후에도 신라의 '평화공세'는

집요하여 672년 이후 거의 해마다 사절을 보냈다. 한반도의 대세가 신라로 기울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덴무조(天武朝)는 종래의 외교정책을 변경하여 675년에 공식사절을 신라에 파견하였다. 그리하여 양국간에 국교가 성립하기에 이른다. 일본은 당과의 관계를 끊은 채 신라와의 외교관계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留學僧을 파견하였다.

고대 삼국의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 내부의 일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당시 중국은 물론 일본까지 밀접히 관련되고 있다. 따라서 삼국통일도 동북아 국제관계의 관점에서 깊이 있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 이는 오늘날 남북통일을 갈망하고 있는 한국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 이처럼 동북아 지역은 일찍부터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왔고 이런 연구를 통해 그 사실을 명확히 인식하는 것 또한 동북아가 향후 평화로운 관계 구축해 나가는 데에 의미 있는 일이다.

#### 통일신라, 발해와 일본

#### 【중립】

발해는 고구려 멸망 후 고구려 왕족이었던 大祚榮이 세운 나라이다. 발해는 727년 신라를 견제하기 위하여 高仁義를 공식사절로 일본에 보낸다. 일본에서는 발해의 사절을 극진히 대접하고 이것이 발해와 적대관계에 있던 신라를 자극하게 되어 일본과 신라의 관계가 악화되었다. 이후에도 발해는 727~919년 사이에 총 34회에 걸쳐 일본에 사신을 보냈고 일본 역시 15회에 걸쳐 발해에 사절을 보냈다. 이런 잦은 인적교류를 통해 발해와 일본은 많은 문화교류를 전개하였다.

발해와 일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고대 동북아에서 각 왕조는 개별적 이해에 따라 관계를 맺고 교류를 하였다. 발해와 신라가 오늘날 같은 역사공동체의 일원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가까운 사이였던 것은 아니다. 발해는 발해이고 倭國은 倭國이었을 뿐이다. 오늘날의 민족적 정서로 당시의 상황을 재단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자국 중심의 편협한 역사인식에 벗어날 때 오늘날 한중일 3국

은 마음으로 역사인식을 더 많이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동북아 평화의 길은 더욱 확고해질 것이다.

#### 몽고침략시기의 고려와 일본

#### 【갈등】

몽고가 고려를 공격하여 고려의 국정을 좌지우지하고 三別抄軍마저 진압하게 되자, 1274년 일본원정을 단행한다. 이후에도 몇 차례 더 원정을 시도하지만 태풍과 고려, 중국, 베트남 민중의 저항에 부딪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하게 된다.

13세기말 몽고의 일본원정은 고려와 일본의 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 몽고가 위낙에 해전에는 약했던지라 고려에 의존하게 됨에 따라 麗蒙聯合軍이 결성되어 고려와 일본 사이의 군사적 적대관계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고려조정은 원치 않는 전쟁을 막기 위해 많은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고 일본원정을 무산시키기 위해 몽고에 대한 협조를 거부하기도 했다. 반면 三別抄軍은 몽고에 대한 항쟁을 위해 일본과 연계를 맺으려고 시도하기도 했다. 당시 동북아에는 고려, 중국, 베트남, 일본을 포함해 몽고의 일본원정을 무산시키고 몽고에 저항하려는 무의식적인 연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麗蒙聯合軍의 일본원정 시도는 고려와 일본의 관계는 물론 동북아 국제 연대의 일단을 살펴볼 수 있음에도 연구는 부진한 형편이다. 이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麗末鮮初 倭寇의 진압과 韓日の 交隣關係

#### 【중립】

일본에서 남북조의 군사분쟁이 민중의 생활을 궁지에 몰아넣자 쓰시마, 이키, 기타큐슈의 어민과 농민이 식량을 얻어내기 위해 고려 연안의 쌀 창고를 습격했다. 나중에는 기타큐슈의 무사단과 세토나이카이해적이 가담하여 고려의 피해는 날이 갈수록 커졌다. 이에 1367년 고



러는 金龍 등을 교토에 파견하고, 막부는 왜구 진압에 착수할 것을 약속했다. 그러나 막부의 무력만으로는 해적이 진압될 수 없음을 깨달은 고려왕조는 1377년에 鄭夢周를 규슈의 지방장관에게 파견한다. 이것이 전례가 되어 고려는 일본 서부지역 호족들의 힘을 빌리는 정책을 펴는 한편, 1389년에는 직접 아소 만에 있는 해적의 거점을 공격하기도 한다. 그로부터 3년 뒤 고려왕조가 무너지고 조선왕조가 세워진다.

조선왕조도 승려 覺鑿를 도쿄에 보내 왜구 단속을 요청한다. 막부는 이를 수락하면서 交隣을 염원하는 서한을 전달하고, 1404년에는 아시카가 쇼군이 사절을 조선에 파견함으로써 양국 사이에 交隣關係가 확립된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선린관계가 성립되었지만, 왜구 문제는 더욱 기승을 부렸다. 14세기 중엽 이래의 倭寇는 몽고의 일본원정과 더불어 한일관계에 중대한 현안이었다.

그런데 倭寇의 문제는 워낙에 갈등의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근래 일본에서 왜구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면서 또 다시 한일 학계간에 쟁점이 되고 있다. 예컨대 왜구의 구성과 관련하여 그것이 단지 일본 사람들만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당시 한국이나 중국 사람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왜구가 국가나 민족의 틀을 넘어 각국의 해안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 상호간의 민간교류에 크게 기여하면서 이를 주도했다는 견해가 제시되기도 했다. 한국학계에서는 대다수 왜구의 경우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반박하는 입장에 있다. 물론 일본 학계의 견해가 왜구의 야만성을 피해하려는 ‘자국 중심의 국가주의적 역사왜곡’일 혐의가 있으나 마냥 비난만 할 수는 없는 일이다. 倭寇란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의 집단인지, 역사적 실체에 대한 검증이 요구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朝鮮通信使와 日本國王

【협력】

조선은 1403년(태종 3)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고, 이듬해 일본의

아시카가(足利) 정권도 책봉을 받아 한중일간에 事大交隣의 외교체제가 성립되었다. 이에 조선 국왕과 일본 막부 쇼군이 양국의 최고통치자로서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절을 파견하였다. 이때 조선이 일본에 파견하는 사절을 朝鮮通信使, 일본이 조선에 파견하는 사절을 日本國王使라고 하였다.

朝鮮通信使는 1811년(순조 11) 마지막 통신사가 파견될 때까지 총 9회에 걸쳐 파견되었는데 많을 때는 인원이 4~500명에 이르렀다. 1876년(고종 13) 강화도조약 이후에는 修信使로 개칭되었다. 이들은 주로 왜구의 창궐과 같은 현안문제를 논의하거나 막부 쇼군의 취임을 축하하기 위해 파견되었으나 체류 기간에 활발한 문화교류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이는 조선시대 한일관계를 규정하는 이른바 ‘交隣關係’를 구현하는 제도적 장치로서, 그 운영의 원리와 실태가 소상하게 밝혀질 필요가 있다. 그 연구의 성과는 한일간 선린관계의 역사경험을 되살려 향후 우호관계의 역사적 자산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壬辰倭亂과 문물교류

#### 【갈등】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명나라로 들어갈 길을 빌려달라는 이른바 ‘入明假道’의 요구를 조선이 응하지 않았다는 구실로 1591년 조선출병 동원령을 내리고 조선을 무력 침공한다. 이 전쟁이 바로 壬辰倭亂인데, 전쟁 초기에는 조총부대의 위력을 앞세운 일본군이 우세하였으나, 머지않아 각지에서 봉기한 조선민중의 의병과 李舜臣을 주축으로 한 水軍의 활약, 그리고 明軍 파병으로 전선은 교착상태에 빠지고, 결국 강화교섭을 벌이게 되나 1596년 교섭이 결렬되어 丁酉再亂으로 이어진다. 결국 1598년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군 전체가 철수하고 전쟁은 막을 내린다.

임진왜란은 참전국의 숫자나 전쟁의 규모, 전후의 영향을 고려해 볼

때 16세기말 동북아에서 일어난 세계대전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관계의 관점에서 보아도 당시로서는 전례가 없었던 군사충돌로서 대표적인 갈등의 사례이다. 전쟁의 참혹함과 당사국 모두에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라는 점에서 반성의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치열한 전쟁의 와중에서도 조선과 일본간에 보기 드물게 밀도 높은 문물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그것은 당초에 전쟁이 의도한 바는 아니었지만 전후 양국의 역사전개와 문화생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일본은 이 전쟁을 통해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대신 조선의 문물을 많이 흡수할 수 있었다. 대규모로 납치된 조선인들을 통해 전해진 ‘완제품’ 상태의 조선성리학과 도자기 기술, 그리고 금속활자 및 서적의 대량 유입 등은 근세 일본사회의 형성과 문화부흥의 바탕이 되었다. 그런 점에서 史家들은 이 전쟁에 대해 ‘문화전쟁’ 혹은 ‘도자기전쟁’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조선 역시 전 분야에 걸쳐 참담한 피해를 입었지만 일본으로부터 얻은 것도 전혀 없지는 않았다. 鳥銃 제조기술과 천주교의 부분적 유입, 그리고 고추와 담배의 전래 등은 조선후기 사회에서 일정한 의의를 지니는 사실이기도 하였다.

역사를 다양한 측면에서 조망한다는 관점에서, 의식적으로라도 갈등의 사례에서 협력의 요소를 눈여겨보는 지혜가 요구된다.

#### 조선후기 한일의 交隣關係

#### 【협력】

조선시대 동북아 국제관계를 규정했던 ‘事大交隣’의 외교체제를 다양한 관점에서 명확히 해명하는 문제는 당시 한일간의 역사적 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핵심적인 문제이다. 이런 점에서 壬辰倭亂 이후 한일의 ‘交隣關係’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약화되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고찰이 매우 필요하다. 아래에서는 그 대강의 사정을 정리해 본다.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에 의한 ‘交隣’ 회복 **【협력】**

히데요시가 죽은 후, 1603년 쇼군(將軍)의 자리에 오른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는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으로 단절되었던 朝鮮·明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동북아 지역에 복귀하기 위해 여러 가지 통로로 교섭을 시도한다. 1604년 8월 조선에서 승려 惟政과 孫文彧을 파견함으로써 국교 회복의 전기가 마련되었다. 그들은 조선인 포로 1,390명을 데리고 귀국하였으나, 이로써 곧바로 국교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조선은 1606년 쓰시마藩이 파견한 사자를 통해서 강화를 위한 요구, 이에야스의 국서와 선왕의 능묘를 파헤친 도적을 잡아 보낼 것을 도쿠가와 막부에 요구하였는데, 중간에 있는 쓰시마藩이 국서를 위조하고 도적을 포박하여 보냈다. 조선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1607년 통신사 일행 467명을 파견했다. 이렇게 해서 도쿠가와 막부는 조선과의 국교를 회복했다.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 1668-1755)와 朝鮮 **【협력】**

아메노모리 호슈(雨森芳洲)는 에도 중기 쓰시마의 유학자이자 외교관으로서, 조선에 매우 우호적이었던, 말하자면 당시의 대표적인 ‘親韓派’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시가縣 출신으로 유학과 의학을 공부했으며 나가사키에서 중국어를, 부산에서 한국어를 습득하였다고 한다. 부산의 倭館에서 근무한 적도 있으며 귀국 후에도 조선에 관한 폭넓은 지식을 바탕으로 35년간이나 조선 담당 외교관으로 활동하였다. 특히 그는 임진왜란 이후 조선과 일본의 관계 회복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는 외교실무경험을 정리하여 對朝鮮 외교지침서인 『교린제성』과 조선어 회화 입문서인 『交隣須知』, 『朝鮮風俗考』 등을 저술하기도 하였다. 그는 조선과 일본의 관계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선의 법제, 풍속을 집대성한 경국대전을 잘 이해하고 조선 측의 사정을 충분히 연구하

여 이를 바탕으로 한 ‘誠信外交’ 를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다년간에 걸친 외교 경험에서 나온 것으로, 임진왜란 이후일본에 대한 조선인의 적대감을 깨뚫어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역사인물로서 한국인이 잘 알고 있는 일본인들은 대개가 부정적인 이미지로 각인 되어 있다. 이런 점에서 아메노모리 호슈는 예외적이며 다양한 측면에서 깊이 있게 연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역사 속에서 한일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했던 인물들을 발굴함으로써 한일간에 우호적 역사인식의 폭을 넓혀갈 수 있으리라 믿는다.

‘易地聘禮’ - 흐려진 ‘交隣’ 정신

【갈등】

‘易地聘禮’란 ‘장소를 바꾸어 외교적 만남의 의전을 갖는다’는 뜻으로, 일본사절이 조선에 올 경우 서울까지 오지 못하고 東萊에서 교섭하였듯이, 조선사절이 일본에 갈 경우에도 수도인 에도(江戶)까지 들어오지 말고 중간지대인 쓰시마에서 교섭을 하도록 해서 외교의 형평성을 맞추자는 주장이었다. 어린 나이에 쇼군에 취임한 이에나리(家齊)를 대신 해서 정권을 장악한 막부 중신의 우두머리인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는 쓰시마에 조선통신사가 쓰시마까지만 오도록 하는 ‘易地聘禮’를 교섭하도록 명령했다. 그 명분으로 당시 흉작과 기근으로 인한 재정적 어려움을 들었고 실제로도 그랬지만, 그 내면에는 ‘조선국왕’과 ‘일본국왕’이 대등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의지가 잠재해 있었던 것이다. 결국 1811년 쓰시마에서의 ‘易地聘禮’가 결정되었다.

이는 기존의 외교관행이 일본의 주장에 의해 변경되는 일로서 임진왜란 이후 회복되었던 ‘交隣關係’가 약화됨을 의미하는데, 당시 변화되고 있는 일본의 ‘자타인식’을 포함하여 이 과정에 대한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 메이지유신과 ‘交隣’에서 ‘征韓’으로의 선회 【갈등】

메이지유신으로 일본에 신정부가 들어선 지 불과 5년도 지나지 않아 조선에 대한 ‘征韓論’이 불거지면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기본입장이 에도(江戶)시대의 ‘交隣’에서 ‘征韓’으로 급속히 변화되었다. 토쿠가와 막부 말기 國學의 세례를 받은 이른바 ‘志士’(공부한 사무라이)들이 메이지유신을 주도하고 새로운 정권의 주역으로 등장하면서, 일본의 조선에 대한 기본입장이 ‘대등한 선린관계’에서 ‘日本 天皇과 朝鮮 國王의 상하관계’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에도 시대에 조선국왕과 막부 쇼군 사이에는 대등한 관계가 수립되어 있었다. 그러나, 메이지정부는 신정부의 수립을 조선에 알리는 國書에서 ‘일본천황’을 황제의 禮로 묘사했다. 메이지유신의 주역들은 천황을 지고지순한 일본의 精粹로 여기고 일본의 실질적인 구심체로 복귀시켰는데 이런 입장이 國書에 담겨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는 조선 사대부의 세계관에서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고, 해당 국서를 접수조차 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정부 안에서 무력침공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요구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이른바 ‘征韓論’이 대두하였다. 이에 대해 조선을 침공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덜 되었다는 時機尙早論이 대립함에 따라 실행에 옮겨지지 못하는 못하였다. 그런데 이 반대론도 ‘한국 침공’ 자체에 반대한 것이 아니라 단지 충분한 준비가 이루어진 다음에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메이지정부 초기의 ‘征韓論’은 근대 이후 처음으로 일본이 자기 우월의식에 기초해 대외 침략의 의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동북아의 미래에 짙은 암운을 드리우는 일이었다. 실제 동북아를 불행의 역사 속으로 몰아넣은 強固한 갈등구조가 성립되는데, 征韓論은 그 ‘떡잎’과도 같은 존재였다. 오늘날의 한일간 뿌리깊은 불신과 갈등도 이때부터 잉태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북아가 진정한 평화를 이루려면 이런 갈등사태에 대한 반성을 통해 불행한 역사를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위해

서라도 다양하고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 강화도사건과 강화도조약의 체결

#### 【갈등】

일본은 메이지유신(1868) 이후에 서구화 내지 근대화에 성공하면서 제국주의 국가로 변모하지만, 처음부터 우월한 지위에 있었던 것은 아니다. 일본도 19세기 중반 서구제국주의 열강의 침입이라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기는 마찬가지였고, 중국이 영국에 의해 개항되면서 불평등조약체제에 편입되었듯이 일본도 영국을 학습한 미국에 의해 개항되면서 불평등조약의 굴레를 모면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일본은 역사상 그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빠른 변신에 성공하였고, 자기들이 서구열강에 당했던 그 방법을 그대로(실제로는 더욱 악랄하게) 조선에 적용하면서 조선을 개항시켜 제국주의 침략의 첫 단추를 꿰었는데, 그것이 바로 강화도사건과 1879년 2월에 조인된 강화도조약이다.

근대 이후 동북아에 참여한 갈등구조가 성립되는 데에는 뭐니뭐니해도 일본제국주의의 정치·군사적 팽창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 본격적인 시초가 강제적인 개항이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근대 동북아의 갈등구조에 대한 반성의 교훈을 얻기 위해 빼놓을 수 없는 연구주제라고 할 수 있다.

#### 임오군란, 갑신정변, 오사카사건과 일본의 조선내정 간섭 【갈등】

壬午軍亂은 1882년 6월 일본식 軍制 도입과 閔氏政權에 대한 반항으로 일어난 구식군대의 軍變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일본정부는 피해보상문제를 빌미로 제물포조약과 「朝日修好條約」을 체결한다. 결국 임오군란은 대외적으로는 청나라와 일본의 조선에 대한 권한을 확대시켜주는 국제문제로 변하였고, 대내적으로는 갑신정변의 바탕을 마련해 주게 되었다.

1884년 12월 4일에 일어난 甲申政變은 金玉均을 비롯한 급진개화파가 개화사상을 바탕으로 조선의 자주독립과 근대화를 목표로 일으킨 정변이다. 그러나 급진개혁파를 지지하는 사회적 기반이 매우 협소했기 때문에 그들은 일본 병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 淸나라와 일본에 파병할 수 있는 권한을 열어줌으로써 일본이 조선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길을 확대시켰다.

갑신정변 이듬해(1885) 일본에서는 오사카사건이 발생한다. 이는 1885년 옛 자유당 당원이었던 오이 겐타로(大井憲太郎), 고바야시 구스오(小林樟雄) 등이 20여 명의 검객을 조선에 보내 청나라에 가까운 민씨 정권의 고관을 살해하고 김옥균, 박영효 등의 개화과정권을 다시 수립하려는 계획을 세우나 사전에 발각되어 그 주모자들이 검거되는 사건이다. 임오군란이나 갑신정변은 그 동안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오사카사건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다. 오사카사건은 일본의 조선내정간섭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학술적 검토가 필요하다.

#### 한일무역과 방곡령사건 【갈등】

강화도조약 체결로 조선의 문호가 개방되었다. 개국 후 처음으로 침투해온 것은 일본의 상인과 상품이었다. 청일전쟁 전까지 조선은 일본의 면제품과 雜貨類를 수입하고, 쌀, 콩, 쇠가죽 등을 수출하였다.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면포 및 면사에 의해서 조선의 면화재배와 棉業은 큰 타격을 받는다. 자급자족하고 있던 쌀과 콩이 대량으로 일본에 수출됨에 따라 심각한 식량부족과 쌀값폭등이 발생하고 이는 민란으로 연결되기도 했다. 일본상인의 과도한 매점매석으로 식량위기에 빠지자 일부 지방정부에서는 '防穀令'을 내력 식량유출을 방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방곡령이 외교문제로 비화해 일본의 압박으로 조선 측이 배상까지 하기에 이르는데 이를 '방곡령사건'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1889년 10월에 함경도, 1889년 5월 및 1890년 3월에 황해도에 발생하였다.



이 사건은 국내 식량자원의 유통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된 조선정부의 대일 종속성을 여실히 보여주며 경제적 영역에서 한일간의 불평등 관계가 정립되었음을 보여준다.

#### 청일전쟁과 한일관계

#### 【갈등】

청일전쟁은 청나라와 일본이 조선에 대한 주도권 놓고 벌인 전쟁이었다. 여기에서 승리한 일본은 조선에서 청나라를 배제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일본은 청일전쟁 후 조선에 대한 내정간섭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러시아가 주도한 프랑스, 독일의 이른바 '삼국간섭'에 의해 일본이 시모노세키 조약에서 획득한 요동반도를 청나라에 반환할 수밖에 없게 되자, 조선정부 안에서는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러시아를 끌어들이 일본을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일본은 대원군을 설득하여 옹립하고 1895년 10월 8일 왕궁에까지 쳐 들어가 명성황후를 시해하는 만행을 일으킨다. 이러한 일본의 만행은 큰 반발을 불러일으켜, 의병운동과 독립협회운동이 일어나게 된다.

조선, 일본, 청, 러시아 등 청일전쟁을 둘러싼 당사국의 움직임은 당시 동북아에 정립된 침예한 갈등구조를 압축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점에서, 갈등과 대립이 난무하는 근대 동북아 역사를 이해하고 그 갈등구조에서 반성의 교훈을 얻는 데에 청일전쟁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이슈이다.

#### 일본제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와 한국의 저항

#### 【갈등】

19세기 중엽 서구제국주의의 동북아 침입으로 야기된 갈등구조가 한일관계에도 얽혀들어 오면서 일본제국주의의 침략과 식민지 지배, 이에 대한 한국민족주의의 저항으로 이어진다. 이는 한국 민족과 국민에게 쉽게 잊을 수 없는 치욕과 고통을 안겨주었고 일반 일본국민들도 엄청

난 부담을 감내해야 했다. 역사상 한일간에 가장 치열했던 갈등의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불행하게도 이런 어두운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지 못하고 오늘날 한일간의 불신과 갈등에 근본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 역사적 관점에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양자가 상호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역사인식의 공유 없이는 동북아의 진정한 평화는 무망하다고도 할 수 있다. 아래에서는 관련되는 몇 가지 사안들을 정리해 본다.

#### 러일전쟁과 한국강제병합, 그리고 국권회복을 위한 투쟁 【갈등】

극동에서 식민지 분할을 둘러싸고 날카롭게 대립하게 된 러시아와 일본은 1902년 1월의 英日同盟이 체결된 이후 무력충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양국은 조선과 만주에 대한 양국의 우월권을 둘러싸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 일본정부는 국내의 주전론을 배경으로 1904년 2월 10일 러시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된다. 러일전쟁은 일본이 전투에서 우위를 점한 가운데 미국 루스벨트의 주선에 의해 1905년 9월 5일 강화조약이 조인되고, 이 조약에서 일본은 조선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승인 받게 된다. 러일전쟁 후 1905년 11월 이른바 ‘을사보호조약’이 체결되어 조선의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이른바 ‘통감통치’가 시작된다. 이후 5년도 지나지 않은 1910년에는 일본의 한국 강점이 시작되었다.

그 사이 조선에서는 국권을 회복하려는 민족주의운동이 여러 형태로 전개되었다. 크게 보아 반일의병운동과 애국계몽운동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일본의 폭력에 무력으로 대항하려 한 것이 반일의병운동이었다면, 독립을 위한 실력을 양성하고자 한 것이 애국계몽운동이었다. 의병운동은 일본군의 무자비한 무력진압에 의해 1914년을 즈음해서 좌절되고 해외에서의 독립군운동이 그 맥을 잇는다. 개화파계 인사들이 주

축이 된 애국계몽운동 역시 日帝의 탄압으로 당장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지만 국내외 다양한 민족해방운동으로 이어진다.

### 무단통치와 3·1運動

【갈등】

1910년 8월 22일 이른바 ‘한일합방’이 이루어졌다. 이 사실은 8월 29일 세상에 공표 되고 일본에 의한 통감정치는 총독정치로 바뀌어 일본이 패전할 때까지 지속된다. 막대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선총독은 행정기구로부터 독립된 총독 직속의 헌병경찰제도에 의해 보장되었다. 이를 위해 일본군이 조선에 상주하였고 한국 민족의 반발을 탄압하기 위한 만반의 무력을 확보하였다. 또한 한국인에게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일체 인정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는 <회사령>을 공포하여 민족자본의 발전을 억누르고, 일본자본의 한국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러한 무단통치는三一獨立運動의 배경이 되었다. 1919년 3월 1일 서울 과고다공원에 수많은 시민과 학생이 모여 독립선언서를 낭독하고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시위운동이 전국에 파급되어 한국 전역을 휩쓸었으나, 일본 본토에서 군대가 추가로 파견되었고, 군경에 의해 전국 각지에서 무자비한 유혈진압이 자행되었다. 결국 3·1운동은 일시적으로 좌절되었으나, 일본으로 하여금 ‘문화통치’로 식민지정책을 전환하게 만들었고, 한국민족 내부적으로는 독립운동과 해방 후 건국의 정신적 지주가 되었다.

### 일제의 식민지 경제정책과 한국경제

【갈등】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 경제정책은 1910년대 토지조사사업과 1920년대의 産米増殖計劃, 1930년대 공업화정책으로 이어졌다. 이는 기본적으로 일제의 식민지 수탈과 경제지배를 위한 것으로 여기지만,

이로써 한국의 경제근대화가 시작되었다는 이른바 ‘植民地 近代化論’도 있다.

#### 皇民化政策과 한국인의 저항

【갈등】

조선총독부는 한국통치를 시작한 처음부터 동화정책을 추진했으나, 1937년 7월 중일전쟁이 개시된 것을 계기로 同化政策이 이른바 ‘皇民化政策’으로 강화되었다. 한국인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일본천황의 ‘충실한 신민’으로 만들려는 ‘皇民化’ 교육이 진행되었고, 학교교육에서의 한국어 사용을 금지했으며, 한국식 성명은 일본식 氏名으로 바꾸는 創氏改名을 강요했다.

이에 한국인은 저항했다. 예컨대 <조선어학회>의 움직임을 들 수 있다. 3·1운동을 계기로 한글운동의 맥을 이어 1921년 12월 <조선어연구회>가 창립되었고, 1929년 10월에는 <朝鮮語辭典編纂會>가 조직되었으며, 1931년에는 <조선어학회>로 개편되어, ‘한글맞춤법통일안’ 등을 제정하고 한국어와 글을 연구·정리·보급하는 활동을 계속했다. 1942년 10월부터 일제가 조선어학회 회원과 관련자를 검거하여 재판에 회부, 실형을 선고받게 하며 한글운동을 탄압한 사건(조선어학회사건)이 일어났다.

#### 關東大地震과 在日韓國人 학살

【갈등】

1923년 9월 1일 關東 일원을 습격해 도쿄, 요코하마 등을 폐허로 만든 관동대지진이 발생하였다. 일본에서는 대규모 재난과 관련해 군중심리에 영합하는 유언비어가 발생하곤 하였는데, 특히 관동대지진과 관련해서는 “不逞(불온하다는 뜻)鮮人이 強盜질 한다”, “不逞鮮人이 폭탄을 가지고 있다”는 등 한국인을 모함하는 내용이 주류를 이루었다. 이런 유언비어는 마침내 일본인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였고, 일본정부는

비이성적인 사회 분위기에 휩쓸려 계엄령을 선포하고 6천~1만에 이르는 한국인 노동자를 대량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는 한국과 일본에 모두 지극히 불행한 사건이었으며 그 역사 속에서 ‘반성의 교훈’을 얻어야 한다.

#### 일제의 조선인 강제연행과 저항

#### 【갈등】

일제는 1937년 7월 중일전쟁의 발발로 전쟁이 확대되고 장기화되어 군수물자와 노동력의 수요가 급증하자, 전면적인 국가 통제와 동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1938년 4월 1일 <國家總動員法>을 공포하였다. 이 법률에 따라 한국인 강제 동원 및 연행이 시작되었다. 연행방식에 따라 세 시기로 나뉘는데, 제1기는 1939년 9월~1942년 2월의 시기(모집단계)로, 탄광, 광산, 토건업 등을 하는 업자에게 한국인 집단 연행이 허가되었다. 제2기는 1942년 3월~1944년 8월까지의 시기(관청알선단계)로, 각급 관청이 나서 한국인 노동자를 징집하였다. 제3기는 1944년 9월~1945년 8월 일본 패전까지의 시기(강제징용단계)이다. 이 시기에는 한국에도 <國民徵用令>이 적용되어 공공연히 강제연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일본에 강제로 끌려간 한국인 노동자들은 가혹한 노동력 수탈 체제에 굴종하지 않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탈주나 작업 거부, 적극적으로는 파업과 폭동으로 맞섰다. 그리고 작업장 내에서 독립운동조직을 결성하여 비밀리에 운동을 전개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특히 일제시기 강제징용의 문제는 그 징집 대상으로서 인권을 유린 당했던 당사자들이 생존해 있고 아직도 이들이 사과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안이다. ‘정신대 할머니’ 문제에서 보듯이 아직도 현실 사회의 이슈가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도 한국과 일본이 ‘화해와 평화를 위한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해야 하는 문제이다.

## 한국전쟁과 일본

## 【중립】

한국전쟁은 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군에 의한 북위 38도선 이남에 대한 침공으로부터 1953년 7월 27일의 휴전협정 체결에 이르기까지 만 3년 동안 계속되었다. 그러나 도중에 미군을 주력으로 한 유엔군과 중국 인민의용군이 참전함에 따라 국내분쟁에서 국제분쟁으로 발전하였다.

한국전쟁이 일본에 미친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영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었다. 특히 경제적 영향이 주목되는데, 미군이 일본에서 대규모의 군수 물자와 서비스를 조달함에 따라 전후 일본경제부흥에 일대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일본이 재무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전쟁이 한일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는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전쟁이 역사연구의 대상에 편입되기 시작한 마당에 한국전쟁과 일본의 관계를 연구하는 작업 또한 戰後 한일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 한일기본조약의 체결

## 【중립】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韓日基本條約>은 한일 양국의 일반적 국교관계를 규정한 조약이다. 이는 ‘大韓民國과 日本國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4개의 부속협정으로 이루어졌다. 1951년부터 한일 양국 간에 국교정상화를 위한 회담이 수 차례 열렸으나 재산권 청구문제, 평화선 문제, 재일동포의 법적 지위문제 등에서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1960년대 박정희 정권이 경제재건을 위한 일본자본의 도입을 목적으로 일본과 회담을 재개한 결과 조약 체결에 이르게 되었다. 조약에 따라 외교 및 영사 관계를 개설하였고,

일본측은 대한민국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저리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을 공여하기로 하였고, <어업에 관한 협정>에 의해 양국 연안 12해리의 어업전관수역과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생산성 확보를 위한 ‘共同規制水域’을 설정하였다. <在日僑胞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해 재일 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고, <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에 의해 한국정부는 일제시대 일본으로 유출된 문화재를 반환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 조약은 전후 한일관계를 규정짓는 첫 번째 중요한 사안이고, 지금도 많은 문제들이 이 조약에 규정을 받고 있다. 미래의 한일관계를 조망함에 있어 이에 대한 역사적 접근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다.

## V. 맺음말

이상에서 우리는 한중일 3국이 유사 이래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왔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각국은 나머지 상대국과 서로 긴밀히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발전했다. 특히 한자, 유교, 불교, 율령, 역사서술, 日曆, 의료, 美意識 등의 요소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활발한 교류가 있었고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 문화교류의 중심에 중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전체적으로는 동북아의 모든 주체가 합심해서 만든 합작의 결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관계의 긴밀함은 문화교류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갈등의 역사경험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한 나라의 내부정세 변화가 동북아 전체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왔던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戰國’을 통일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본 내부의 변화가 야기한 壬辰倭亂으로 동북아 전체가 극심한 변화를 겪게 된다.<sup>1)</sup> 麗蒙聯合軍의 일본원정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찾아볼 수 있다. 麗蒙聯合軍의 일본원정이 실패하게 된 데에는 때마침 불어닥쳤던 태풍이 하나의 원인으로 작용했지만, 결국 몽고제국이 일본원정을 포기하게 되는 데에는 당시 동북아의 정세가 크게 작용했었다.<sup>2)</sup> 일본은 동북아의 정세변화가 자신들의 위기를 면하게 해주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지만, 동북아 각국의 역사는 이처럼 서로 맞물리면서 전개되었던 것이다. 근대 이후의 갈등 구조는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다.

1) 조선의 경우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점이 될 정도로 폭넓은 변화를 겪었고, 일본의 경우는 도요토미 정권이 붕괴되고 토쿠가와시대(德川時代 : 江戸幕府)로 전환되었다. 류큐가 1609년부터 사쓰마번의 무력지배를 받게 되었고, 明朝마저 얼마 후인 1644년 淸朝에 의해 교체되었다. 이와 같이 일본 내부에서 일어난 사단이 내정을 포함하여 각국의 자체 역사발전에도 크게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2) 원정에 필요한 군함, 군량, 군사 등을 준비하라는 요구에 강남의 중국인이 반란을 일으키고 고려왕조도 회피하려는 태도를 취했다. 때마침 베트남에서 몽고에 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났는데 너무나 완강하여 일본원정에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게 되었고, 이렇게 되자 고려와 중국 강남 사람들은 부담이 줄게 되어 크게 기뻐했다고 한다.



이처럼 동북아 3국의 관계는 역사적으로 가히 숙명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一國史를 연구할 때도 반드시 동북아 전체에 연계되어 작용했던 동북아 내부의 관계구조를 이해하면서 서술해야 한다. 만일 이러한 내적인 관계구조를 이해하지 못하고 일정한 지역의 역사만을 보게 된다면 그것은 역사의 한 단면만을 보게 되어 그 사실성이 호도되거나 혹은 왜곡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이와 같은 관계의 긴밀성은 자연스럽게 ‘동북아 질서’라고 부를만한 하나의 질서구조를 낳았다. 그 중심에 중국이 놓여 있었다고 해서 중국에 의해서만 구축되고 운영되었던 것으로 볼 필요는 없다. 엄연히 한국과 일본도 유기적인 질서구조를 구성했던 주요 구성원이었기에, 각각의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자율적 발전성을 가지고 공존했던 역동적인 지역으로 보아야 한다. 말하자면 대국이건 소국이건 모두 마음으로 받아들여 평화로웠던 조화와 공존의 질서 및 역사경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전통시기 동북아의 유기적 관계가 근대 이후 서구 및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깨어지면서 서로간에 갈등과 경쟁심만 커졌고 때로는 원수와 같은 적대관계가 되기도 했으며 그러한 갈등구조가 어느 정도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전통시기 동북아 질서 속에 내재해 있는 조화와 공존의 질서를 현대적 의미로 승화시켜 새로운 질서형성에 반영한다면 문제해결의 실마리가 조금은 풀어지지 않겠는가 생각된다. 따라서 ‘개방된 관점’을 가지고, 편협한 ‘중화의식’ 내지 ‘자기중심적 인식’을 지양하고 조화와 공존의 본질적 성격을 재발견하는 방향으로, 전통시기 동북아 질서를 새롭게 연구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동북아가 화해와 반성, 평화를 위한 역사인식을 공유하기 위해 ‘개방된 관점’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현재 한중일 3국의 역사서술이 ‘자기중심적’이라는 특성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보면 협력의 역사경험인데 현재의 역사 서술 문제로 와서는 분쟁의 사례가 되는 경우가 단적으로 이런 특성을 보여준다. 예컨대,

일본 고대문화가 형성되는 과정에 끼친 고구려, 백제, 신라 三國의 영향 내지 공헌에 대한 평가가 한 가지 사례가 될 수 있다. 이는 분명 이른바 ‘동북아 문화권’이 형성되는 과정으로서 한국과 일본이 한자, 유교, 불교 등의 주요 문화요소를 공유하게 되는 협력의 사례인데, 일본 학계나 교과서의 서술은 중국과의 직접적 관계를 강조하거나 한국(三國)의 영향을 폄하, 누락, 축소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한국에서는 이에 반발하며 한국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강조한다. 이처럼 문화교류에서 자신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하는 것뿐만 아니라, 壬辰倭亂<sup>3)</sup>이나 倭寇<sup>4)</sup>의 경우에서 보듯이 갈등의 사례에서 자신의 입장을 무리하게 옹호하는 경우는 더욱 흔하게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최근의 고구려 및 발해 역사 귀속문제에서 보듯이 중국은 자국 내부의 문제, 즉 새로운 개념의 중화민족을 창출하여 소수민족의 원심력을 통제하려는 방편으로 고대역사를 왜곡하고 있다. 한국사 서술이 강한 민족주의적 경향을 띠고 있는 것도 부정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아무튼 현실적인 필요나 그 밖의 이유로 어떤 다른 관점을 갖느냐에 따라 역사서술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에 필자는 본 프로젝트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먼저 의식적으로 자국 중심의 역사서술에서 벗어나 ‘개방적인 역사인식에 기반을 둔 동북아 역사서술’을 실천하자고 제안하는 바이다. 이렇게 해야 비로소 중국과 일본에도 ‘개방적 관점’의 역사서술을 설득력 있게 제기할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포괄적 연구와 연구자들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 진정한 ‘화해와 반성을 위한 동북아 역사인식의 공유’가 가능해지고 이는 향후 평화로운 동북아 질서 수립에 든든한 밑거름이 될 것이다.

3)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임진왜란의 발발 원인, 승패관계에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4) 본문에서도 언급했듯이, 왜구를 둘러싼 한국학계와 일본학계(교과서 포함)의 쟁점은 주로 ‘왜구의 구성원 및 성격’에 집중되어 있다. 예컨대 일본에서는 ‘왜구=일본인’이라는 인식을 피하기 위해 초기 왜구의 구성원에 조선인을 포함시키고 있고 후기 왜구는 대부분이 중국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왜구가 각국 해안지대에 살고 있던 민간인의 교류 및 네트워크에 크게 기여했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한국이나 중국에서는 이를 반박한다.

## 동북아시아의 협력과 갈등의 역사

---

편집 및 발행인 | 동북아시대위원회

발행일 | 2005년 1월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609호  
동북아시대위원회 사회문화협력팀

전화 | (02)3703-2678~9

팩스 | (02)3703-2682

홈페이지 | <http://www.nabh.go.kr>

e-mail | [cjk1@cwd.go.kr](mailto:cjk1@cwd.go.kr)

이 책의 내용 중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동북아시대  
위원회 사회문화협력팀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비매품>